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8. 18 (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정치화를 우려한다

좌 장

이 성 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발 제 자

양 정 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토 론 자

전 희 경 국회의원

박 정 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황 영 남 前 영훈고 교장선생님

권 순 활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 형 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주 최 염동열 · 이종배 · 이은재 · 곽상도 · 전희경 국회의원,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목 차

기조강연

4차 산업혁명과 향후 한국교육의 방향

이 성 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7

발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양 정 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15

토론

이제 교육에도 자유화가 필요하다

전 희 경 (국회의원).....45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 토론문

박 정 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51

문재인정부 100일, 선거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교육정책

황 영 남 (前 영훈고 교장선생님).....57

‘한국의 추락’ 부를 좌편향 - 反시장 교육 경계해야

권 순 활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63

전교조의 실태

조 형 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69

기조강연

4차 산업혁명과 향후 한국교육의 방향

이 성 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과 향후 한국교육의 방향

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I. 불확실성의 시대

현재 우리는 문자 그대로 급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으로 하여금 단 10년 앞도 안 되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래에 대한 우려 섞인 예측들이 모든 영역에서 표출되고 있다.

본인은 컴퓨터 공학자도 아니고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적어도 현재 선진국, 특히 미국의 Silicon Valley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컴퓨터 공학과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 예로, 이미 Stanford 대학 근교의 도시에서는 ‘자가운전차량(self-operated vehicle)’이 주행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향후 5-10년 이내에 이러한 차량이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운전(driving)을 주 임무로 하는 직업 역시 소멸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동차보험업계에 일대 변혁이 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영국의 한 경제전문주간지에서는 이미 선진국의 금융권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발상이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가까운 장래에는 심각하게 경감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다소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컴퓨터 공학과 기술의 혁신적 발달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에 가까운 급격하고도 엄청난 변화를 가까운 미래에 가져 올 것이다.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이 종종 computopia라는 괴이한 용어로 인류의 앞날을 미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인의 견해로는 이는 매우 편협한 단견이다.

산업혁명은 기계를 사용해 인간이 직접하는 노동의 수고를 덜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한 현상이다. 이는 일면 노동의 수고를 경감시키기는 했으나 많은 수의 일자리들을 희생시켰다. 대량실업은 어찌 보면 산업혁명의 필연적인 부작용이었으며 심지어 Luddite Movement라고 알려진 기계파괴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도기는 3-40년 정도 이어졌으며 이후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service 산업이 탄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진정되고 고용이 오히려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 공학의 발달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산업혁명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인간의 기능을 대신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인간에게 할애될까? 어떤 미래학자는 가까운 미래에 6-70%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탁월한 두뇌와 천재적인 역량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인 컴퓨터 관련 산업의 특성(예; Google, Microsoft, Amazon, Uber 등)이 이러한 예측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다.

II, 문제의식의 상실, 무지, 그리고 무관심

선진국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대책들이 공학 및 기술, 경제,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많은 인구에게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컴퓨터 테그놀로지의 발전이나 로봇의 등장과 활용 등 다분히 '공상과학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듯하다. 일부 언론에서 지극히 부분적으로 '미래 사회의 직업' 운운하며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 역시 우리의 인식(awareness)의 변환보다는 가벼운 호기심의 충족에 치중하는 것 같다.

특히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의식수준은 그야말로 무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 하나 가까운 미래에 닥칠 급변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하다. 심지어 그것이 대재앙이 된다고 해도 자신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 마디로 문제의식의 상실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한 후보만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변혁에 대해 극히 부분적으로 언급했을 뿐, 나머지는 아예 공약이나 정견의 어느 부분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스스로 정치지도자를 자처한다면 권력의 행사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더 중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래의 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 중의 하나는 교육이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 정부에 의해 공표되는 대다수의 교육정책들은 이제까지 논의된 미래의 변혁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인다. 자사고 폐지, 고교 학점제, 수능등급 절대화 등은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과거에 거론되거나 추진된 적이 있는 것들이다. 과거의 것이라고 다 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급변하는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혹자는 본인이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 무조건 비판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본인은 이미 지난 정

권의 자유학기제나 십시일반식의 대학구조조정 등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학교교육의 수월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미국 교육정책의 기조는 1980년대 초 Reagan 대통령 시절에 형성된 이후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에 따라 정책의 명칭은 다소 변경되었음)

한 국가의 제도적 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서는 미래의 학교 졸업생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식과 기술인지에 대해 부단히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교육자나 교육관계자들이 좌든 우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자신들이 소속된 집단의 진영논리에만 치중한다면 100년은 고사하고 10년을 염두에 둔 교육정책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III. 한국교육의 이정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교육이 선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탈정치화(de-politicalization)다. 앞서 선진국의 예를 인용했지만, 선진국이라 해서 교육이 정치이념의 영향에서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몇 해 전 현재의 New York 시장인 Blasio가 부임 즉시 시내 Charter School(우리나라의 자사고와 유사한 형태지만 자사고에 비해 엄청난 자율권을 가진 학교)를 축소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차별화된 교육제도를 타파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이념을 정책에 반영한 셈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로 이 학교에 다니던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이 입는 촌극 아닌 촌극이 벌어진 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가 좀 지나친 것 같다. 한국의 사정을 잘 아는 본인의 외국인 친구가 “한국의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정치화된 것 같다.”라고 평한 적이 있다. 공감이가는 말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교육정책을 효과적인 득표 전략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시화되는데, 이 때 교육의 본질과 가치는 도외시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과거 진보 진영의 득표에 일등공신이었던 ‘무상급식’이 갖는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들조차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보수도 이런 유형의 전략에서 초연할 수 있을까?)

교육의 탈정치화를 위한 급선무는 교육의 본연에 대한 각성이다. 교육의 본연은 인간을 인간답게 육성하는 것이다. 인간다움의 근원은 우선 도덕성이다. 이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차별화하는 가장 원초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에 적응하며 성공적으로 생존하는 것 역시 인간다움의 중요한 조건이다. 진부한 표현을 빌리

자면, 교육의 본연은 결국 덕성과 지성의 연마, 혹은 인격과 능력의 겸비 정도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인간의 도덕성은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일자리의 축소로 경쟁이 과열되고 부의 편중이 심화될수록 인간의 윤리적 측면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도덕과 윤리가 상실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 역시 소멸될 것이다. 향후 인류사회가 어떤 형태로 변모된다 할지라도, 도덕과 윤리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야 한다. 이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의 첫 번째 명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나 다문화적 소통과 이해 등도 모두 도덕과 윤리에 포괄될 수 있는 자질이나 태도다. (이런 연유에서 고대 Greece의 철학자들 특히 Socrates는 지식과 도덕을 등식화 했고, 도덕적 지식의 실천을 강조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생존 능력에 관한 부분이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과학과 실용적 지식이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처럼, 현행 과학 및 기술(technology) 교육의 강화는 물론 컴퓨터 관련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학교육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특히 algorithm 교육이 중등교육 과정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컴퓨터 강국이라는 말은 지나친 과장인 것 같다. 컴퓨터 공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algorithm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고도 교육부는 ‘100년지 대계’ 운운하는가?)

직업교육체제의 보강 및 확대 역시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과잉공급 상태이며 심각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그 기능이나 교육목적 상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200여개나 되는 4년제 대학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상당한 정도 대체하게 되는 미래와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체계화되고 심화된 직업교육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유럽형 체제의 도입과 확산을 고려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4년제 대졸 실업 현상’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환고탈태가 시급하고 절박하다.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다. 그러나 4000개가 넘는 대학들의 기능과 특징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반수에 가까운 대학들이 우리로 치면 2년제 대학(취업중심)이고 나머지 대학들도 학생들의 수준, 필요, 능력, 그리고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중점 사업, 목표 집단, 재정 등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게 차별화되어 있다. 우리에게 소위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 박사양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알려진 대학들은 매우 후하게 추정한다 하더라도 미국 전역에 걸쳐 200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어떨까? 상술한 바와 같이 200여개의 4년제 대학들 중 상당수

가(본인의 의견으로는 최소한 1/3 이상) 상위 5-6개 연구대학의 행태를 모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대학들도 이제 연구, 학부생의 교육, 성인 교육, 직업 교육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상이한 기능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이 새로이 조직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대학들이 미래에 대비하는 방책이자 생존할 수 있는 전략임을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위해 동서양의 고전과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컴퓨터 관련 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를 대비하는 또 하나의 교육 전략은,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의미 있고 가치로운 지식을 연마하는 일이다. 이는 곧 동서양의 고전적 문학, 철학, 역사, 그리고 예술을 학교교육을 통해 폭 넓게 가르치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이성의 시대(The Age of Reason)’로 지칭되는 시대의 산물인 계몽사상은 인간의 비합리적 측면(종교와 예술)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지만, 계몽사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낭만주의(the Romanticism)가 18세기와 19세기 유럽 사회 전체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역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컴퓨터 시대에 상실되기 쉬운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이런 고전교육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

Shakespeare의 희곡 “Julius Caesar”의 한 장면이다. Caesar 장례식장에서 Anthony는 군중을 향해 “나는 Caesar를 칭송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묻으러 왔다”라고 외치며 의미심장한 연설을 시작하지만 시종일관 Caesar를 찬양한다. 본인 또한 이 자리의 청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현명한 대비책을 함께 강구하기를 권유하려고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일말의 불안감을 조장한 것 같아 다소 송구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모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그 미래는 우리에게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멀지 않은 과거에 역경을 딛고 교육을 통해 국가의 입지를 공고히 한 경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다시 한 번 교육의 힘을 발휘할 것을 희망하며 본문을 맺는다.

발 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양 정 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전망

양 정 호

2017. 8



목 차

1. 한국교육 위기, 성과와 도전
2.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100일 평가
3.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주요 핵심 정책
4.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향후 전망

1. 한국 교육 위기: 성과와 도전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교육? 현실은...

Go Back to

개천!!!

OECD 최고의 학업성취!, 그러나 최악의 학생행복?



(자료: Levy, Where in the world you can find the best schools-and the happiest kids, 2014)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 삼포+세대, 빙고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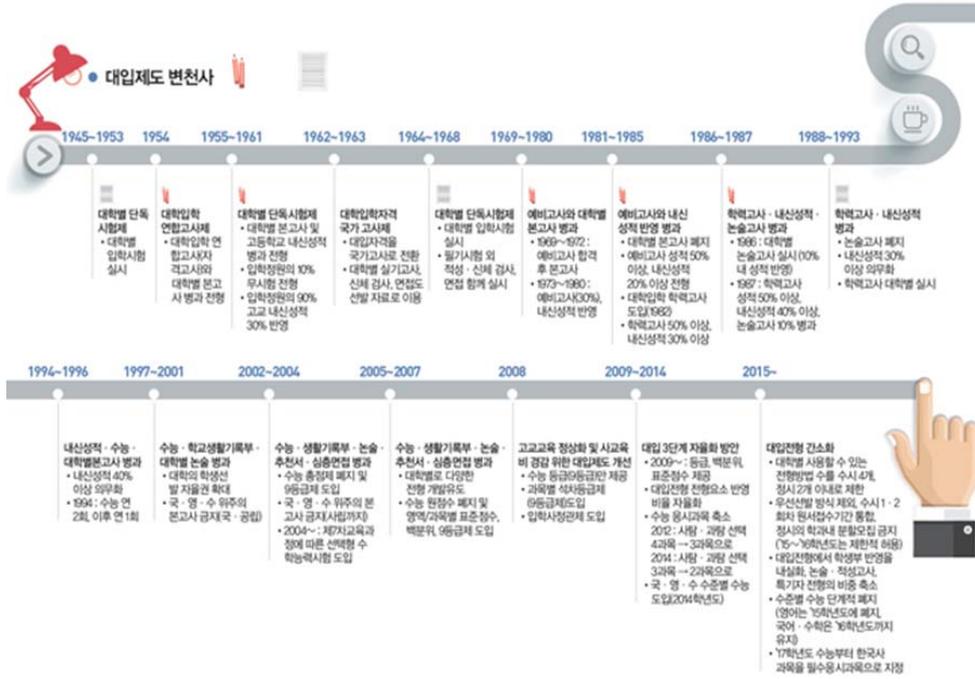


화장실에 물 받는 데야 있음	연립주택에 살	세뱃돈이 10만원 넘은 적 없음	알바 해본 적 있음	부모님이 정기 건강검진 안 받음
집에 욕조 없음	집에 장판이 뜨거나 들긴 곳 있음	부모님 취미생활 없음	부모님이 자식 교육에 집착 심함	집 TV가 브라운관이거나 30인치 이하 평면
냉동실에 비닐로 반 원기가 많음	부모님이 음식 남기지 말라고 잔소리함	가계부채 있음	고기는 주로 물에 넣고 끓이는 방식으로 요리해 먹음	중고나라에서 거래해본 적 있음
부모님 이혼	1년 내내 신발 한두 켤레로 번갈아 신음	식탁 유리 아래 식탁보가 비닐로 된 것임	집에 비데 없음	여름에 에어컨을 잘 안 틀거나 에어컨 자체가 없음
본가가 월세이거나 1억 이하 전세	인터넷 쇼핑할 때 최저가 찾느라 시간 많이 투자함	집에 차가 없거나 연식 7년 이상	옷장에 유행 지났는데도 챙겨둔 옷 많음	집에 곰팡이 핀 곳 있음

*25개 항목 중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에 'O' 표시를 한다. O가 가로·세로·대각선 등 직선으로 5개 이어지면 '빙고'. 몇개의 빙고가 만들어지느냐로 얼마나 '흙수저'인지 가능하는 자조 섞인 게임

(자료: 국민일보, 2015.8.28; 사회정책자문회의, 2015)

수많은 대입제도 변화, 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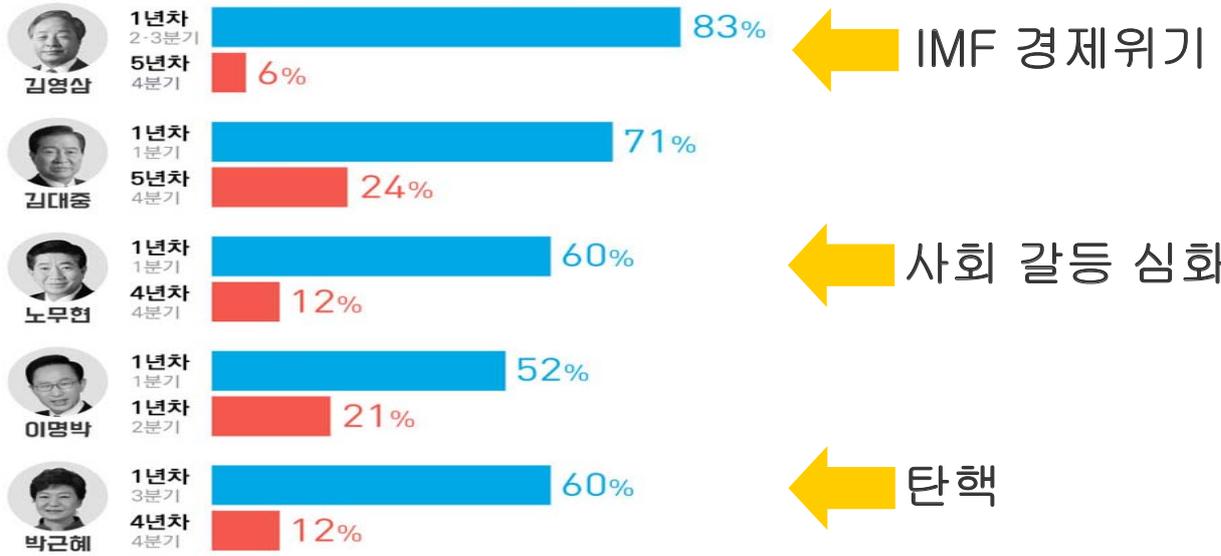


(자료: 이코노미조선, 2015.5)

2.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100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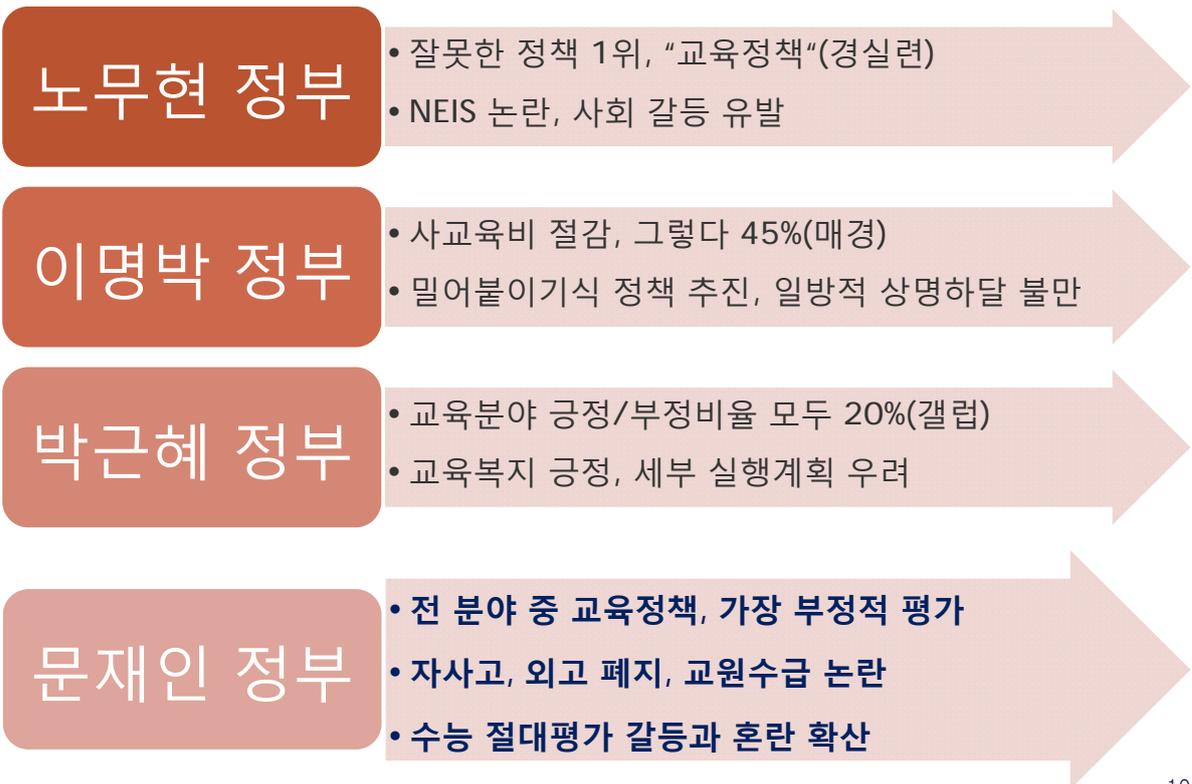
역대 최고, 최저 지지율... 결과는?

높은 지지율과 정부 성공 상관관계는 거의 0%!



(자료: KBS, 2017.6.2: 갤럽조사)

□ 역대 정부 100일 평가



수능 논란과 갈등, 본격적 시작?

수능 절대평가 = 반대, 혼란, 우려 연관어 급증

연관어

매체선택: 전체 | 연관어갯수: 10개 | 확인 | 확대보기

- 전체
- 인물
- 단체
- 장소
- 상품
- 속성
- 브랜드
- 취미/여가
- 심리



금/부정 연관어

매체선택: 전체 | 연관어갯수: 10개 | 확인

- 전체
- 긍정
- 부정
- 중립
- 기타



(자료: 소셜 매트릭스 활용 자체분석,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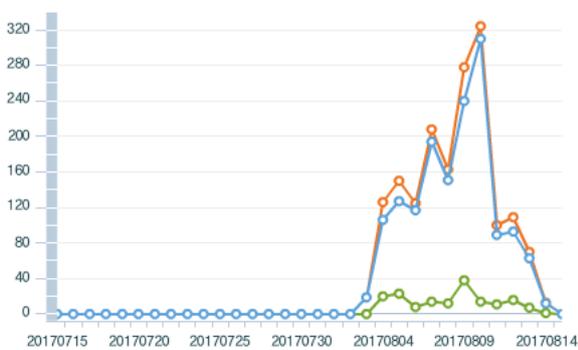
초등교사 임용 논란과 갈등, 본격적 시작?

서울 임용 선발인원 부족 발표 후 부정적 SNS 여론 급증

'임용절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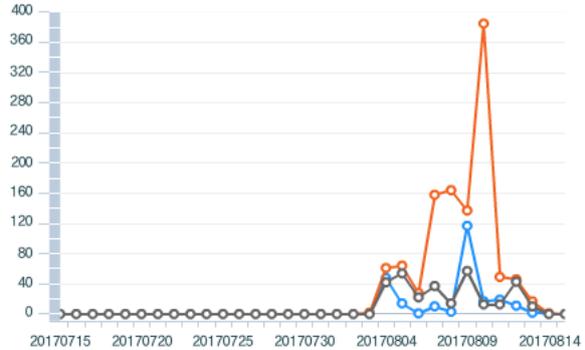
기간: 2017-07-15 ~ 2017-08-15

언급량 추이



○ Total ● Blog ○ Twitter

금/부정 추이



○ 긍정 ○ 부정 ○ 중립

(자료: 소셜 매트릭스 활용 자체분석, 2017)

초등교사 임용 논란과 갈등, 본격적 시작?

초등 임용 논란 = 임용절벽, 허탈, 위기 연관어 급증

연관어

매체선택 전체 | 연관어갯수 10개 | 확인

- 전체
- 인물
- 단체
- 장소
- 상품
- 속성
- 브랜드
- 취미/여가
- 심리



긍/부정 연관어

매체선택 전체 | 연관어갯수 10개 | 확인

- 전체
- 긍정
- 부정
- 중립
- 기타



(자료: 소셜 메트릭스 활용 자체분석, 2017)

3.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주요 핵심 정책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흐름

❖ 대선기간: 교육공약 발표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13개 공약

❖ 국정기획위기간: 향후 국정과제 발표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 6대 과제

❖ 교육부 추진방안: ?

17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방향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 모든 아이? 개념 혼란 가능성

-> 개념상 저소득층, 상류층, 우수학교, 취약학교 모두 포함

-> 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우수학교 폐지, 하향 평준화 유도 모순

- **국가 책임교육**(5년 동안 정부평가시 부메랑될 수 있어 가장 부담)
- 혁신 교육
- 공정 교육

18

□ 문재인 정부 교육분야 공약과 국정목표 비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집권 후 5개년 계획

공약

1 촛불혁명 완성
- 부정부패 척결
- 공정한 대한민국
- 민주·인권 강국

2 더불어성장
- 일자리 마련
- 넘치는 성장동력
- 전국이 골고루 잘살게
- **민생·복지·교육 강국**

3 한반도 평화와 안전
- 평화롭고 강한 나라
- 안전한 대한민국

4 지속가능한 사회
- 지속가능과 성평등
- 문화 강국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추가

1 국민이 주인 - 국민주권 실현
- **소통의 광화문 대통령**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권력기관 민주적 개혁

2 더불어잘사는 경제 - 소득주도 일자리 경제
- **공정경제**
- 서민 민생경제
- 과학과 4차산업혁명
- 중소벤처 혁신성장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국가 책임 보육·교육**
- 공평 차이는 인정사회
- 차별없는 공정사회
- 자유·창의 문화국가

4 고르게 지역발전 - 풀뿌리 자치분권
- 골고루 균형발전
-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5 평화와 번영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남북협력과 비핵화
- **당당한 외교**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자료: 머니투데이, 2017.7.19)

19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대 국정과제

교육공약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 온종일돌봄학교 운영
- 공교육혁신, 사교육비 경감
- 고교 학점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
- 1:1 맞춤형 교육 추진
- 든든한 울타리 학교(교사 전문성 신장)
-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 대입제도 단순화
- 고졸희망시대(직업분야 특성화고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체제
- 교육 계층 사다리 복원
- 대학 체질 강화

국정과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혁신**
-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20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재인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주권의 촘촘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 문재인 정부 교육분야 세부 6대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 은종일 돌봄체계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현 •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전환 • 기초학력 보장 및 1수업 2교사제 •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 미래사회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 • 대입제도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강화 •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 대학 자율성 확대 및 대학 기초연구 강화 •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 전문대 질 획기적 제고 • K-MOOC 등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 •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 교육민주주의 회복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부 기능 개편 • 단위학교 자치 강화 •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 문재인 정부 교육분야 소요 예산



(자료: 이투데이, 2017.7.20)

23

□ 문재인 정부 교육분야 소요 예산, 실현불가!

최소 30조 이상 필요, 현실적으로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 낮음



◇문재인 정부 교육 국정과제 이행 소요 자원 추계(단위: 억원)

국정과제	추가소요(2017예산제외)					총액 (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누리과정 국고부담	1조700	1조700	1조700	1조700	1조700	5조3500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2800	5600	8500	8500	8500	3조3900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250	500	750	1000	1000	3500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8460	8460	8460	8460	8460	4조2300
초·중·고 교원 증원	1050	2100	3150	4200	5250	1조5750
교육환경개선	5000	5000	5000	5000	5000	2조5000
초등 돌봄교실 확대	3500	7000	7000	7000	7000	3조1500
초등 기초학력보장제	3300	3700	4000	4400	4400	1조9800
고교 무상교육 실시	-	-	5600	1조1200	1조6800	3조3600
특목고·자사고 폐지	-	1300	2600	4000	4000	1조1900
자유학기제 확대	700	700	700	700	700	3500
자유학년제 도입	700	700	700	700	700	3500
반값등록금 확대	2000	2000	2000	2000	2000	1조
대학입학금 폐지	1000	2000	3000	4000	4000	1조4000억
소계	3조9460	4조9760	6조2160	7조1860	7조8510	30조1750

자료: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자료: 관련기사, 2017)

24

□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정책

- ❖ 무상교육 확대
- ❖ 수능 절대평가 및 대입전형 단순화
- ❖ 자사고, 외고 폐지 및 혁신학교 확대
- ❖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추진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 전교조 합법화 및 교사 정치참여 허용

25

□ 무상교육 확대 -> 재정 확보방안?

- ❖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 유치원, 어린이집 국고지원
 - 유보 통합 추진, 사립 유치원 반발?
-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2020부터 단계적 실시, 2022년 완성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 ❖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부담 경감
 - 반값등록금 실현, 입학금/대입전형료 경감

26

□ 무상교육 확대 -> 교사수급 혼란처럼 정부불신 예고?

- ✓ 각 분야별 요구 분출 <- 사립 유치원 추가지원, 교사 증원 요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 ✓ 예산 확보 난항 -> 당사자 불만 표출 -> 임시 봉합 -> **사회 갈등 확산 악순환 반복**



교육부, 국정기획자문위 보고
교원 증원 계획



추가경정예산안, 3000명 증원

증원 대상	인원
유치원교사	800
특수교사	600
중등 교과교사	470
보건교사	240
영양교사	360
상담교사	380
사서교사	150

연간 +1050억

(자료: 관련 기사)

27

□ 수능 절대평가 및 대입전형 단순화 -> 대입 혼란?

❖ 수능 절대평가 추진

- 현행 절대평가(한국사, 영어)
- 현 중3대상 2021학년도 수능방향 발표 필요
-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절대평가?
- 국어, 수학, 탐구과목 확대?

❖ 대입전형 단순화

-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등 3가지로 단순화
- 현행 논술, 실기전형 준비생을 위한 대안?
- 내신도 절대평가시 상당한 혼란 예상

28

□ 수능 2021학년도 절대평가 개선안 -> 새로운 혼란!

수능(현재)

- 국어, 수학
- 한국사, 영어 (절대평가)
- 과학탐구, 사회탐구, 직업탐구
- 제2외국어, 한문

수능1(최소변경)

- 국어, 수학
- 한국사, 영어(절대평가)
- 과학탐구, 사회탐구, 직업탐구
- **통합사회, 통합과학 (절대평가)**
- **제2외국어, 한문 (절대평가)**
- 학생부담 증가
- 대입 혼란 증가
- 탐구선택과목유불리 확산

수능2(최악변경)

- 국어, 수학(절대평가)
- 한국사, 영어(절대평가)
- 과학탐구, 사회탐구, 직업탐구 (절대평가)
- **통합사회, 통합과학 (절대평가)**
- 제2외국어, 한문(절대평가)
- 학생부담 증가
- 대입 대혼란 증가
- 수능 공정성 의문 여론 확산

□ 수능 2021학년도 절대평가 개선안 -> 대혼란 예고!

수능 난이도와 절대평가 시행을 가정한
등급별 동점자 인원 산출 최초 분석 결과

발표당일 공개 예정

□ 수능 2021학년도 절대평가 개선안 -> **대혼란 예고!**

수능 개선안 여론조사 분석 결과

발표당일 공개 예정

□ 수능 2021학년도 절대평가 개선안

-> **2007년 데자뷰, 재탕 예고!**

노무현 정부

“2008 수능 9등급만 제시 강행”

문재인 정부

“2021 수능 절대평가 강행”

죽음의 트라이앵글 불만 폭발!!

(수능, 내신, 논술 삼중고)



2008학년도 대입 제도 및 본고사 설문 조사 (단위: %)

응답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능 부담을 줄인다	학생	28.5	29.1	26.5	11.8	4.2
	교사	9.2	41.7	35.5	12.9	0.8
	학부모	15.9	32.5	32.7	14.8	4.1
대학별 고사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학생	3.9	12.2	40.6	32.0	11.3
	교사	1.1	13.6	32.5	44.3	8.5
	학부모	2.3	12.0	40.7	35.9	9.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로또 수능” 불만 폭발?

(탐구 선택 과목별 유불리 확대)

□ 자사고, 외고 폐지 및 혁신학교 확대 -> 혼란, 갈등?

❖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 전체 고교중 2% 내외 우수학교 폐지 추진
- 추진시 집권내내 혼란과 갈등 확대 가능성

❖ 혁신학교 확대

- 소위 진보교육감 대표정책인 혁신학교 전면 확대
- 현실적으로 다양한 혁신학교 질적차이 극복이 관건
- 혁신학교 전체 학교중 10%이상 확대시 재정, 질적 차이 문제 노출

□ 자사고, 외고 폐지 및 혁신학교 확대 -> 혼란, 갈등?

	일반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학교 수 (개)	1545	38	46
재학생(명)	125만6108	2만2236	4만6309
서울대 입학자 중 해당 학교 졸업자(%)	65.1	14.5	22.8
설립 취지	중학교 기초 위에 중등교육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외고), 국제 전문 인재 양성(국제고)	설립 이념에 따른 다양한 교육
선발 방식	추첨 또는 배정 (명준화 지역), 내신+선발고사 (비명준 지역)	자기주도학습전형 (영어 내신+면접)	추첨, 자기주도 학습전형 (내신+면접)

자료: 교육부(2016), 서울대(2015~2017)



결국 찬반 논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외고 폐지' 관련 발언

- 2014년 7월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
- 2017년 5월 31일 "자사·외고 등은 그 혜택 거둬들여야" (국회 정책토론회)
- 6월 20일 "자사고 운영성과 관련행정적 합리성 맞춰 평가 진행 중" "외고 폐지는 보수진영 대선 후보들이 주장한 것" "자사·외고 폐지는 교육부가 결정할 일"
- 6월 27일 "급격한 변화에 예고되지 않은 불이익 줄이려는 고민 필요" 연합뉴스 '조 교육감, 자사·외고 일괄폐지 반대 보도 서울시교육청 '사실과 다르다' 반박



□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추진 -> 하향 평준화?

❖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추진

-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 공동학위 네트워크 추진
-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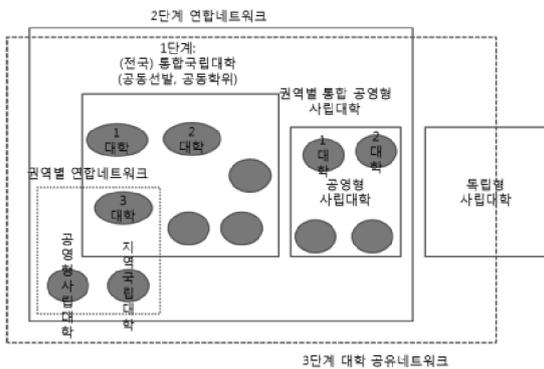
❖ 공영형 사립대 추진

- '19 사립대 중 정부지원 받는 사립대 추진
- 재정지원 연계 통한 사립대 비중 약화

□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추진 -> 대학 부실, 하향 평준화?

새로운 또 하나의 국립대, “한국대?”

공영형 사립대 30개 설립?



- 연 1조 1,000억 예산 확보 문제
- 부실 사립대 -> 정부 예산지원 문제
- 일부 지방 하위권 대학만 신청 문제

- 1단계: 10개 거점 국립대간 네트워크
- 2단계: 12개 지역중심 국립대 통합
- 3단계: 공영형, 독립형 사립대와 통합

국공립대 경쟁력 약화 + 세계 추세 역행 + 부실대학 존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정책 추진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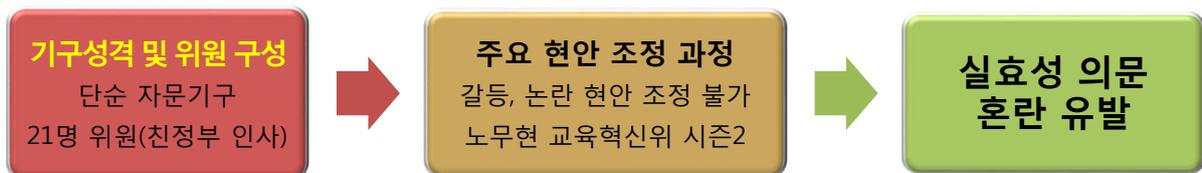
❖ 국가교육회의 설치

- 전체 21명 구성
- 교육부와 역할 조정 진행
- 중장기 주요현안 정책 제안
-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역할 재정립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실권없는 옥상옥 기구?

- ✓ 민간위원장, 당연직 정부위원 + 민간위원, 총 21명
- ✓ 3개 전문위원회: 유치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 ✓ 민감 교육현안 협의: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자사고 폐지, 유보통합 등

자문기구 한계 노출 가능성 ↑



□ 전교조 합법화, 교사 정치참여 허용 -> 학교현장 갈등?

❖ 교원 정치활동 허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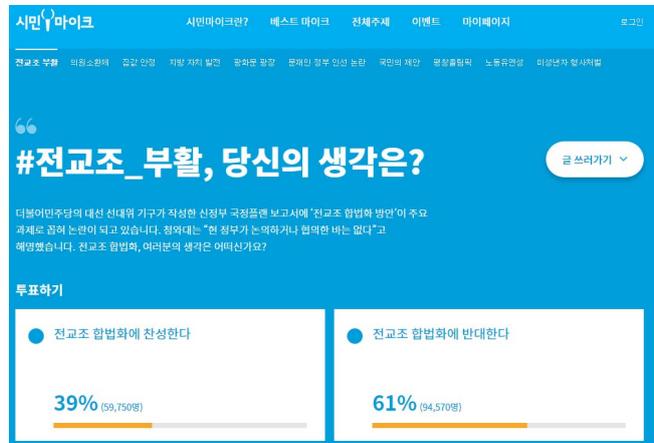
- 민주당, 교원포함한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발의
- 교육부 장관, 시국선언 370명 교사 선처 요구
- 헌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면 배치 논란
- 학부모의 학교현장 정치논쟁화, 이념화 우려 예상

□ 전교조 합법화, 교사 정치참여 허용 -> 학교현장 갈등?

교사 정치활동 부정적 우세
학부모, 최소한 교육현장만큼은 보수적 입장 반영

전교조 결성에서 다시 법외노조되기까지

1987년 9월27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조 전신) 창립
1989년 5월28일	전교조 창립(법외노조), 교사 1527명 파면·해임
1994년 3월	김영삼 정부, 해직 교사 복직 결정
1999년 7월1일	전교조 합법화
2010년 4월	고용노동부 '해고자 조항원 자격유지' 등 5개 규약 시정 명령
2012년 9월	고용부 2차 시정명령, 전교조 거부
2013년 9월23일	고용부 '10월 23일까지 해고자 관련 규약 시정하라' 최후통첩
10월23일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24일	고용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11월13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까지 '노조아님 통보' 효력 정지시킴
2014년 6월19일	법원 "전교조, 합법 노조 아니다" 판결



3.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향후 전망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마다 반복된 교육개혁, 문제는 늘 그대로



입시 지옥 해소와 인간 중심 교육개혁

지식혁명의 주도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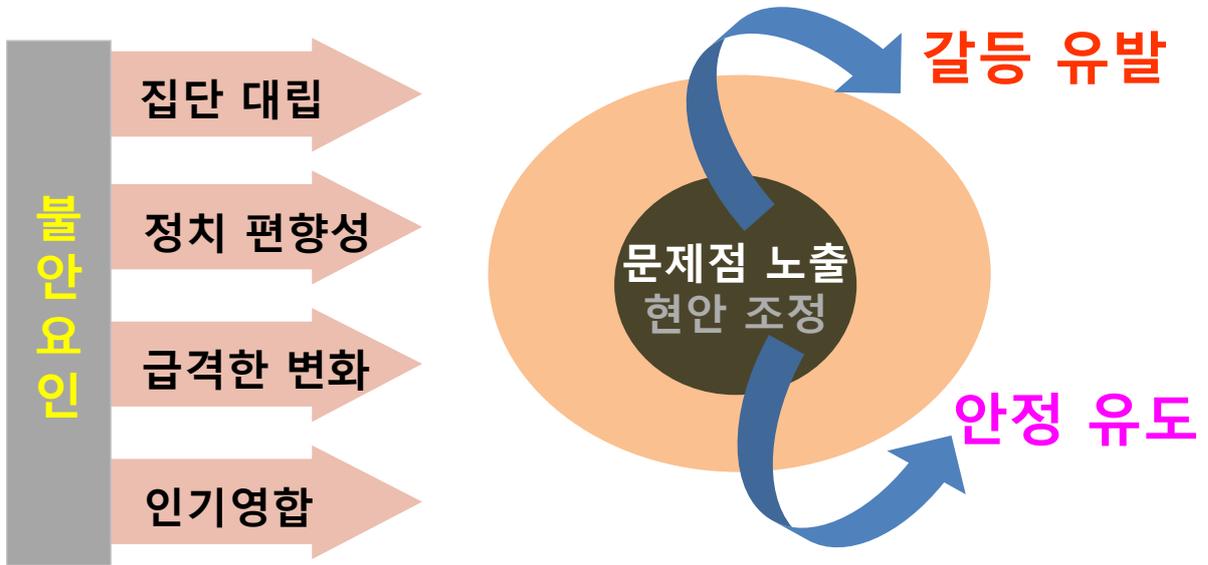


문재인 정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목표, 다시 보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재음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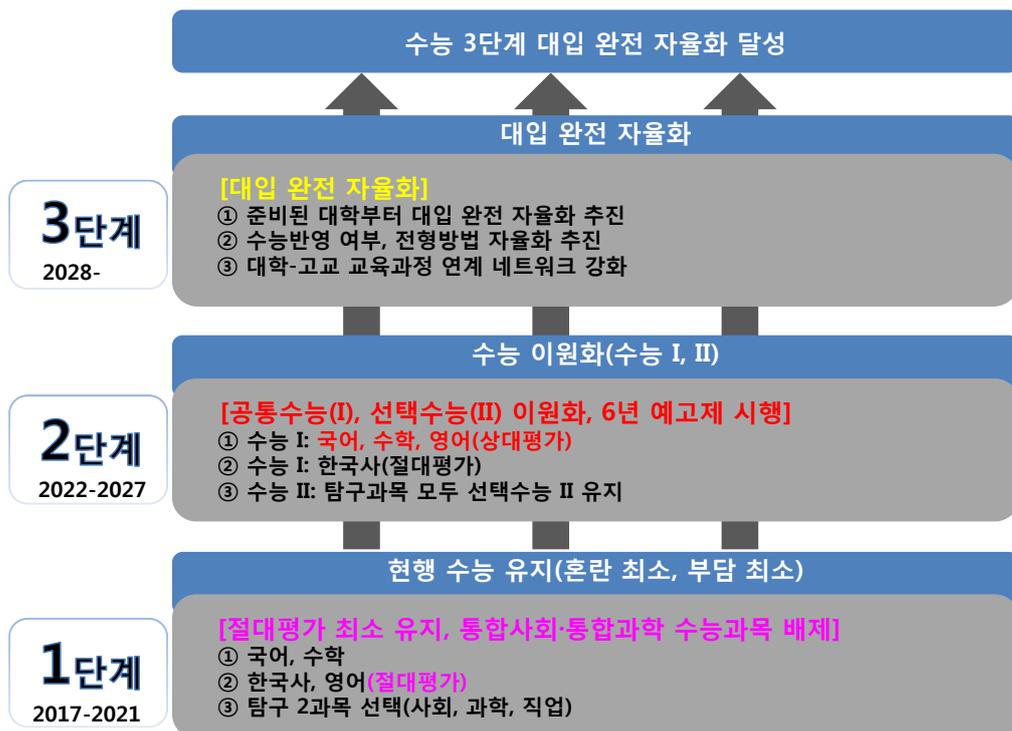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5년후? ‘척’ · ‘것처럼’ 정부 안되야



하지만 현 중3 -> 2021학년도 트리플 악재!



□ 2021학년도 '로또수능' 해결책 -> 수능 3단계 자율화 추진!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 국회차원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

국회차원 국가교육위원회

6년(또는 10년, 12년) 사전 예고제
주요 교육정책 변경 금지 입법화

일관성 있는,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 필요

잡은 정책 변경

5년 정부

혼란 가중

□ 정책방안 및 과제: 인재양성 전담 국가미래교육위원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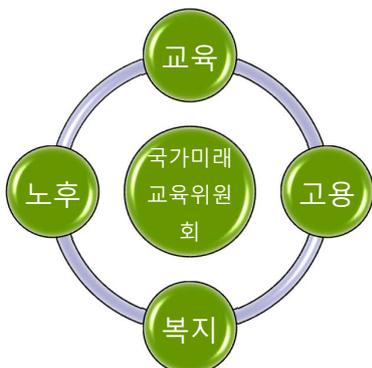
❖ 경제여건 및 세계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초중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개혁 및 인적 자원 고도화를 위한 전략기구인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

- 인재양성은 저출산/보육, 교육, 고용, 복지, 노후를 포괄하는 국가전략으로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설계 중요
- 사회대타협기구인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일반국민의 생애전반학습 또는 교육의지(the will to learning, the will to education)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개혁 지속적 추진
- 교육개혁대통령위원회(10년임기, 박세일, 2015), 미래한국교육위원회(9년임기, 안병영,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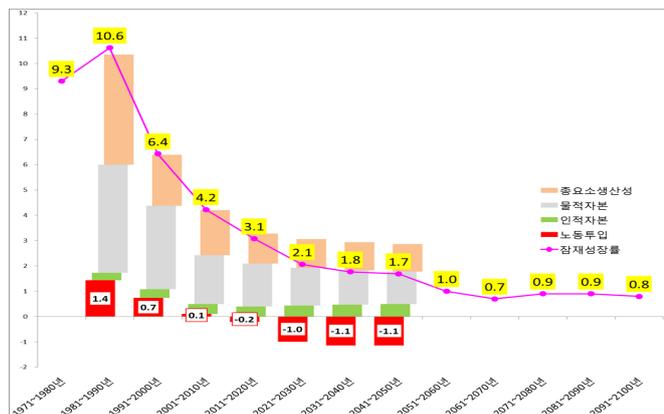
❖ 교육(학업성취, 지적능력)과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이 OECD 모든 국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제는 교육과 경제를 분리해서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상호연계를 통해 제2의 경제도약 모색

- 지적자본(knowledge capital)은 국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Hanushek & Woessmann, 2015)

사회현안과 국가미래교육위원회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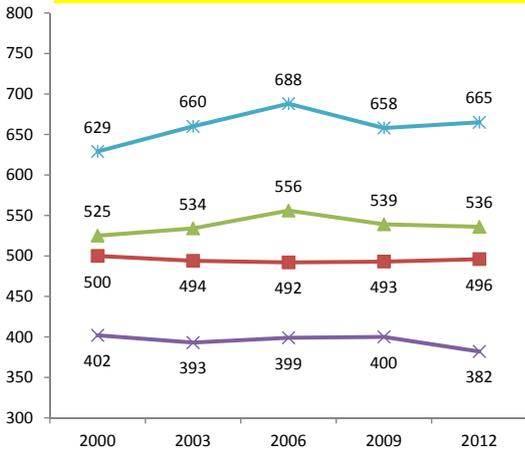
한국 성장 = 잠재성장률 = 교육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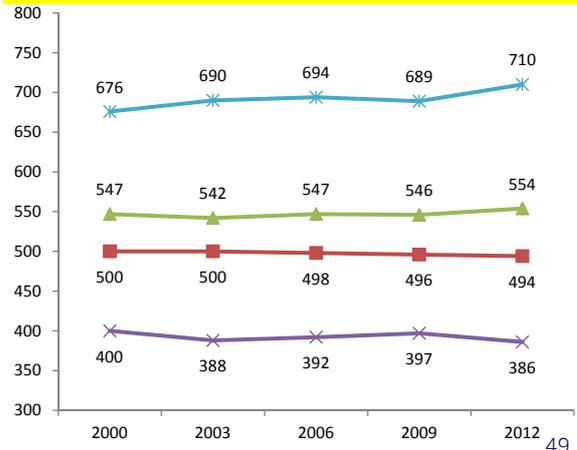
□ 정책방안 및 과제: 우수인재 양성에 정책역량 집중 필요

- ❖ OECD PISA 결과에서 우수인재의 증가보다는 정체, 기초학력수준 인재는 오히려 학력하락 경향 해소 필요
 - OECD PISA 읽기와 수학 점수에서 평균은 상승하나, 최상위(95분위)는 2006년 최고성적을 낸 이후, 읽기에서는 성적이 하락하거나 정체하고 있으며, 수학은 2009년 하락후 2012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임
 - 더 심각한 문제는 최하위(5분위)는 2000년 이후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 2000년대 시기에 사교육이 급팽창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사교육 확대에서 불구하고 우수인재의 양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측면은 전체 초중고 우수인재 양성 정책의 방향성 수정을 의미

PISA 읽기 최상위와 최하위 학생집단별 성적 추이



PISA 수학 최상위와 최하위 학생집단별 성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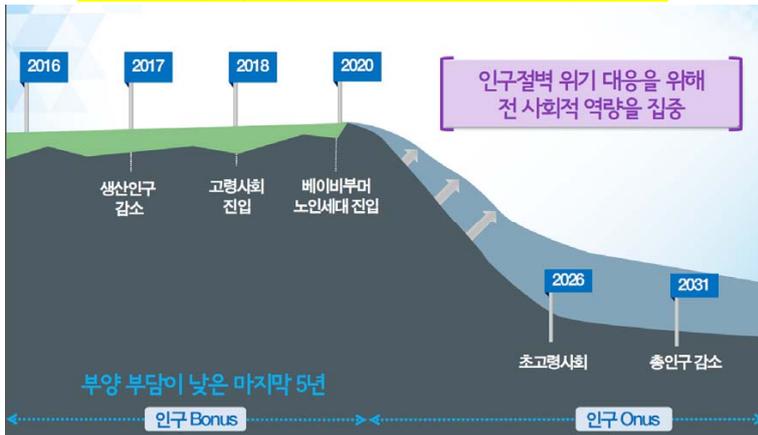


49

□ 정책방안 및 과제: 사교육 문제 해결 및 우수교원 양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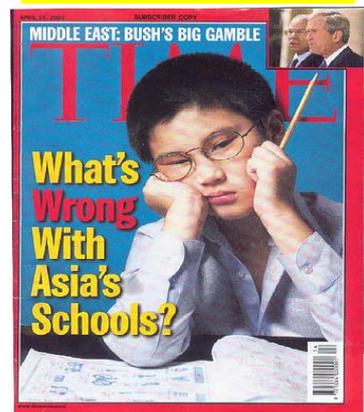
- ❖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현실화되면 교육을 비롯한 경제 및 사회전반의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재양성측면에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 교육경쟁력 부분에서 가장 문제되는 현안은 사교육 문제임. 유아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사교육비 확대로 인해 교육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전반으로 사교육 심화와 사교육비 증가가 한국형 사회문제로 부각됨
 - 사교육 대책방향은 학원 투명성 강화(교습시간 제한, 학원운영 투명화)와 대입제도에서 공교육 활동을 반영하는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의 내실화가 중요
- ❖ 미래인재 양성 및 인적자원 고도화에는 결국 교사의 역량 강화에 집중 필요
 - 교사가 수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부담 완화 등 여건 개선, 교원평가 강화를 통한 우수교사 인센티브 강화 및 전문성 신장과 같은 대책 마련 필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대통령보고, 2015)

아시아 사교육 문제 논란



(자료: Time, 2002.4.15)

50

□ 현실은... 교사된 걸 후회하는 비율 OECD 1위 해결 필수

- ❖ OECD 국가중 '교사 된 것 후회한다' 조사에 전체 중학교 교사 중 20.1%가 후회한다고 응답
 - ✓ OECD 2013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조사에서 후회하는 교사 비율이 OECD 평균인 9.5%보다 두배이상인 20.1%로 가장 높음
 - ✓ '다시 직업선택시,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 란 응답비율도 36.6%로 OECD 평균인 22.4%보다 매우 높음
- ❖ 교사의 질 =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생각해보면, 교사가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부분은 개선 필요
 - ✓ [2013 TALIS] 한국은 교수 및 학습활동 비율 76.9%, 교실질서유지 비율 13.6%, 행정업무 비율 8.2%, 반대로 덴마크는 86.6%, 9.8%, 6.0%로 행정업무 비율이 낮음
 - ✓ 오히려 정규 교사보다 학원강사가 수업 및 교재연구시간이 10배까지 차이나는 것도 가능한 상황
 - * 하루동안 수업 및 교재연구시간: 고교 교사 A씨 30분 vs 학원강사 B씨 5시간(신문)

OECD "교사 된 것 후회" TALIS 조사 결과



(자료: 양정호, 중앙일보, OECD '교사 된 것 후회' 분석, 2015.2.10)

고교 교사와 학원강사 하루 업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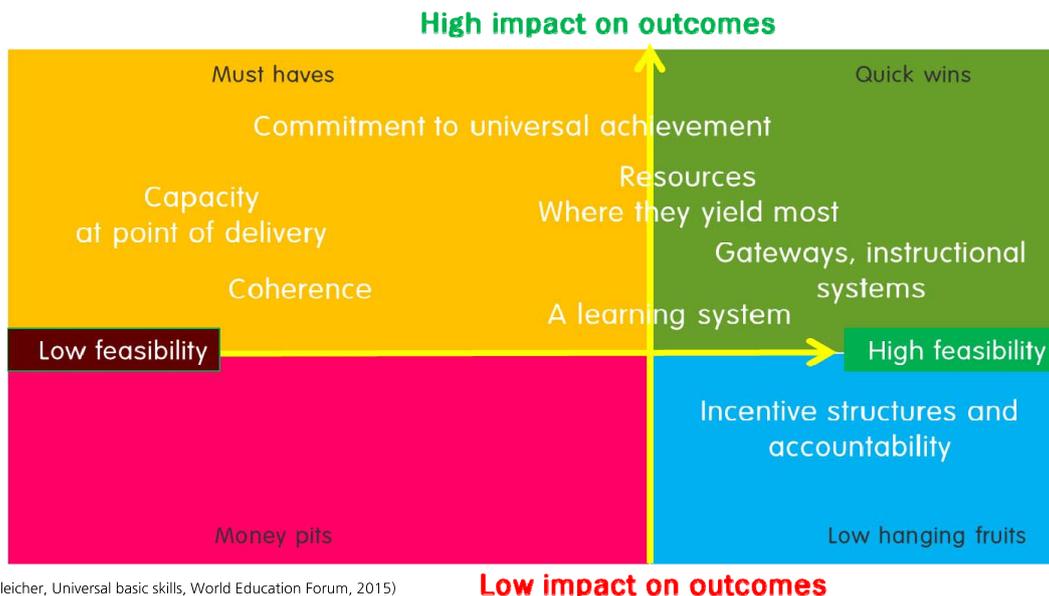


(자료: 동아일보, 수업연구 30분, 행정예 6시간, 2011.5.17)

□ 정책방안 및 과제: OECD 성공적인 인재양성 정책 우선순위

- ❖ 교육개혁에서는 실현가능성, 정책영향력에 따라 세부 정책들간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
 - OECD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교육정책 분석에 따르면, 교육의 중요성 공유, 주체별 교육역량 향상, 효율적 자원 분배, 교원 질 관리, 학습자중심 수업개혁, 인센티브 구조마련 및 책무성 강화,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핵심요인으로 등장
 - 국내 인재양성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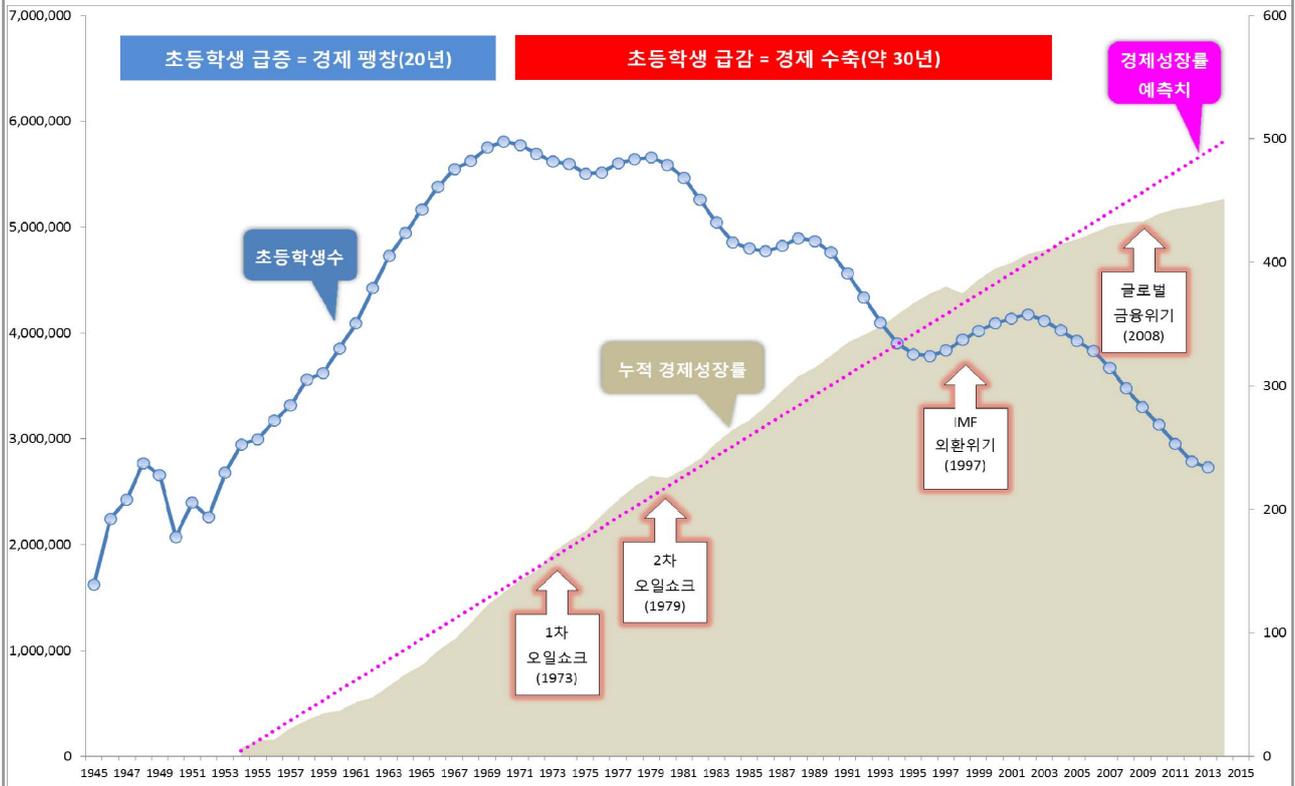
OECD국가별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교육정책



(자료: Schleicher, Universal basic skills, World Education Forum, 2015)

Low impact on outcomes

미래성장 = 교육에 달려!!



교육, 그래도 멀리 보자

- ❖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
- ❖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이 나무
- ❖ 한 번 심어 백 번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

감사합니다.

토 론

이제 교육에도 자유화가 필요하다

전 희 경
국회의원

이제 교육에도 자유화가 필요하다

전희경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문재인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1) 교육의 국가책임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대학 등록금 경감, 고교 무상교육,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 무상교육 확대

2) 혁신 교육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혁신학교 확대, 대입 간소화, 교원전문성 신장
- ⇒ 수능 절대평가 및 대입 전형 단순화, 외고·자사고·특목고 폐지

3) 공정(공평) 교육

- 희망사다리 복원
 - 학력·학벌주의 철폐,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 사회 취약층 교육지원 강화
-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시행, 공공형 사립대 운영

II. 문재인 정부 주요 교육정책의 문제점

1) 무상교육 확대

- 막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 미흡
-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 교육 기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쟁력 저하 및 도덕적 해이 유발
 - 교육 기관의 교육내용을 획일화 해 다양한 교육제공 기회 박탈
 - 교육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초래

*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은 공짜라는 의식을 심어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상실시키며, 결과에 대한 불만 표출이 결국 결과에 대한 평등의 요구로 이어짐.

2)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대입전형 간소화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대입 혼란 초래
- 대학 입시 및 선발에 대한 자율권 훼손
- 변별력 상실로 인한 선발 불공정 초래
- 사교육비 폭증 우려
- 로또 수능, 하향평준화 초래

3)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 다양성·수월성 교육 포기
- 교육 하향평준화 초래
- 우수학생의 교육선택권 제한

4) 혁신학교 확대

- 전교조식 교육 확대에 의한 학교현장 황폐화
- 혁신학교에 대한 특혜 지원으로 일반학교 역차별
- 혁신학교 지원 재정대책 불투명

Ⅲ.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평가

1) 국가주도의 하향평준화 교육

- 우수인재 양성 외면
- 고등교육의 경쟁력 약화
- 수월성, 다양성, 자율성의 세계적 교육추세 역행

2) 교육의 정치화

- 교육의 국가독점 고착화로 교육기관 길들이기
- 능력의 차이를 강자와 약자의 차별로 인식시키는 교육편가르기
- 무상지원 확대, 약자 우선주의 포퓰리즘 강화
- 미래지향적인 교육대책 미흡 및 교육의 복지대책 강화

IV. 제언

1) 교육이념 재정립

- 비판 없이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공공성과 국가책임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차 강조됨.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자아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성찰에 대한 교육이념 없음.

※ 근대 문명은 ‘사적 사치’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고 이를 자아의 본질로 정의함. 인간은 누구에게도 신체와 정신이 구속되지 않은 가운데,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과 그 권리를 가지는데 이 능력과 권리를 바로 ‘자유’라고 함.(이영훈.2014)

- 민주화, 공동체 의식 등이 강화 되고 개인과 자아실현에 대한 가치가 외면되고 있는 교육이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2) 대한민국에서 ‘자유’ 교육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건국과 더불어 ‘자유’의 이념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되어 왔음. 그럼에도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이 자유의 이념이 빠져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움.
- 더욱 선진·문명화 된 국가를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교육에서 만큼은 반드시 ‘자유’의 가치가 가르쳐져야 함.
- 공공성과 국가책임주의로 포장된 교육의 국가독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달콤한 유혹을 즐기는 동안 우리의 미래도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도 없어짐.
- 교육이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를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도록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의식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자유’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함.

토 론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 토론문

박 정 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 토론문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우선 양정호교수님의 발제문 성의껏 마련하신 것 치하하고 전반적인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교육재정확보가 문제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의제인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그리고 대학의 자율을 통한 교육의 창의성과 수월성이라는 가치가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혁신학교, 수능절대평가와 함께 같이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며 우선순위 선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생각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5개년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함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가 설정되었다.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은 공감이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5대 국정전략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기본적으로 내 삶은 자유로운 나의 선택에 기반해야 하고 국가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타당하기 때문이며 교육서비스에 있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획일적인 서비스 내지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강한 규제를 암시하기에 우려를 낳는다.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는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목표 역시 좋은 방향이었는데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21 수능개편안을 발표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운영계획에 근거해 8월 중하순까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최종 고시하고 늦어도 8월말까지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수능절대평가와 함께 내신절대평가(성취평가제) 역시 8월말까지 판단을 마무리하고 수능개편안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일단 국무회의에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입시제도 개편은 주기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교실혁명, 공교육혁신을 이루는 데는 복잡한 통제변수, 환경변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능의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하나는 옳고 다른 하나는 틀린 대안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첫째, 수능은 대학수학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고안된 시험으로 미국의 SAT와 달리 1년에 단 한번 전국 동시 실시로 국가에서 변별력 확보책임을 진다. 현재 각 대학에게는 본고사를 금지하고 있어 수능의 변별력이 학생선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최근 수시전형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전형방식이 고안되고 있지만 내신절대평가가 도입되게 되면 학생부전형도 변별력확보가 어렵게 되어 수능의 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사와 영어를 이미 절대평가로 전환하였는바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의 절대평가 확대라는 차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의 선발권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하고 여기서 자율과 책임의 교육혁신과제들을 다룰 계획인바 이를 8월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수능절대평가전환을 서둘러 확정하는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입시개편은 고교의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2015개정 교육과정이 바뀌어 수능이 바뀌는 것이다. 1993년 처음 시행한 수능이 또 한차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을 감안 누더기가 된 입시, 방향감을 잃은 수능은 보다 근본적 수술이 필요한바 이는 시간과 폭을 넉넉히 잡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수험생들을 더 이상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구성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교수님의 발표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중요한 교육정책의제는 단 기간에 결론을 내리고 다음 정권에서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곤 하는 역사적 교훈에서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되는 것인 국가교육위원회인바 이 때 법적 기초를 확보하는 것과 위원 구성의 중립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순히 자문기구의 역할에서 넘어서 국가적 교육정책의제를 전 사회적 환경변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 방향타를 잡는 노력이 중요하며 치열한 담론형성이 가능하도록 시계를 장기로 설정해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외교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달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중 재지정 평가에서 평가 대상 5곳이 모두 기준 점수를 넘었기에 재지정을 확정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자사고와 외고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하되,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 때 국가교육회의 위원구성의 독립성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바 이것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교육부폐지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과연 과학고, 자사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가 경쟁만능주의 형성, 특권의식 만연, 불합리한 서열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적폐일까.

교육 다양성과 선택의 기회, 획일화에서 일정부분 경쟁을 도입해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려는 1995년 5.31교육개혁의 기본 정신의 토대위에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자사고는, 정부 성향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고교 입시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앞장서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언급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민족사관학교·광양제철고·상산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 등 5개교는 정부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최근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조 자사고로 불리는 이들 학교는 자사고는 고교 교육 전반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모든 자사고를 매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서열화 조장 등을 이유로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사고 등은 오히려 조기 해외유학, 지방교육 황폐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 다양성 부분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학교·학부모 등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단순히 서열화 조장, 대입 예비고라는 명분만으로는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며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일반고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앞서 구성되는 것으로 밝혀진 국가교육회의에서 충실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논의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 때 국가교육회의의 구성이 이념성향 중립적이어야 함은 기본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 붕괴’문제다. 이는 선생님들의 낮은 사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학생 간 학교 간 차이를 무시하는 고교 평준화,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행정에서 기인한다. 교실과 공교육의

붕괴는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해외로의 교육탈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다. 사교육 팽창문제는 과외금지 또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같은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이는 학교자치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제자리 매김 하도록 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사립학교부터 평준화를 풀고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준화 학교(공립)와 비평준화 학교(사립) 사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때 염려되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좋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갈리는 우려를 감안,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사립을 자율화하여 마음껏 '자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들과의 경쟁에 나서는 공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선택의 기회, 경쟁력과 다양성 그리고 형평성을 동시에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초중등교육의 희망을 다시 살려 나가야 한다.

토 론

문재인정부 100일, 선거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교육정책

황 영 남

前 영훈고 교장선생님

문재인정부 100일, 선거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교육정책

황 영 남(성균관대 겸임교수, 전 영훈고교장)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자주 바뀐다. 정부가 바뀌거나 교육부장관이 달라지면 어김없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대입정책만 해도 해방후 지금까지 23번 바뀌고 1994년 수능시험 도입이후에만 11번 바뀐 것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교육정책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번에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또한 교육정책을 많이 바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대입수능개편, 고교학점제 및 내신절대평가제, 자사고·특목고 폐지, 1수업 2교사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표집평가로 전환, 혁신학교 확대, 자유학년제 확산, 공영영사립대 단계적 육성 등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교육관련 6개 영역 30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100일을 지켜본 교육계의 평가는 모 신문의 “[문재인정부 100일] 혼란빠진 국민들, 가시밭길 교육공약” 이란 헤드라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지난 8월 10일 발표한 ‘2021년 절대평가 확대하는 수능개편안’도 명분은 학생의 학습부담과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절대평가 확대를 위한 전제와 환경 조성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과 학부모의 걱정이 많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도 학교와 학부모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고, 신임교사 선발문제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문제도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이렇게 갈등과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정책을 선거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논란이 많은 정책들을 상명하달식으로 추진하는 점이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교육정책일지라도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특성상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비전 속에서 교육정책들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추진해도 교육현장에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어려운 것이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하물며 대선공약이니까 무조건 추진해야 하고 이를 힘을 통해 강제한다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됨은 불문가지이다. 대입수능개편안도 절대평가 확대라는 대선공약을 실행하고자 2021년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해서 전제와 환경을 갖추고 의견수렴이 이뤄진다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에 대한 개인의 자율의지의 경시와 미래교육을 위한 비전제시가 없이 국가의 교육통제를 당연시하는 점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구호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의지는 사라지고 없다. 개인적 존재로서 ‘나’의 삶을 내가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은 자칫하면 전체주의를 연상하게 한다. 개인의 삶 속에 교육복지의 확대와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는 생각되지만,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진다는 명명된 언어가 주는 잘못된 기대와 강압적 효과는 심히 우려스럽다.

3.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없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크다.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공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문재인정부도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학부모의 사교육 걱정을 경감시켜야 하는 과제를 마찬가지로 안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교원집단들의 기득권을 다루지 못하고, 공교육 실패를 정책과 환경 탓으로만 돌린다면 내신절대평가제 실시와 혁신학교 확대도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성과는 요원해질 것이다.

4. 사학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무시하고, 공공성만 강조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학은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위상을 유지해 왔다. 사립학교법에서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하지만 일부 사학의 일탈과 부조리를 일반화해서 사학 전체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부정한다면 잘못된 일이다. 오히려 자사고와 일부 사립학교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건전사학을 확대하는 방향이 학생의 교육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급증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비와 인건비 지원 등에 따른 국가의 교육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교원정책(양성, 임용, 평가 등)의 근본적인 혁신이 없이 피상적 단편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우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해소 공약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첨예한 집단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신규교사 선발의 대폭축소도 저항이 거세다. 1교실

2교사제 등 증명되지 않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무대책을 말하고 있음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교원의 양성과 임용을 체계적·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 적어도 교원 1인이 2~3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고교학점제와 과목 선택제도 성공하기 어렵다. 교원정책을 혁신하지 않는 한 해결방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비대해지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없고,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었을 뿐이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한 이후에 학생수는 큰 폭으로 줄고 있지만,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선출 교육감들이 보여주고 있는 각종 비리와 중앙정부와의 대립, 논공행상식 편향된 교원 인사는 교육계 갈등의 근간이 되고 있기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육에 관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교육감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7.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경영에 대한 대책이 없고, 학생을 위한 교육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무시되고 있는 점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않는 교사들에 의한 단위학교 자치강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권한과 책임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혁신학교의 확대는 잘못된 방향이다. 오히려 법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단위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책임경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단위학교에 대한 각종 통제와 지시는 여전히, 조례와 지침 등으로 오히려 학교를 관리한다면, 단위학교에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존중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8. 교육에서 개인의 선택, 경쟁, 수월성, 다양성의 가치가 무시되고, 배려와 관용, 민주시민의 기본소양 등이 소홀히 되고 있는 점이다. 국가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은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세대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계승하고, 규범과 질서를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유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의식의 함양으로 배려와 관용, 더불어 사는 공존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사회적·공익적으로 의미있는 여러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는 권장하고 어떤 가치는 무시하는 독선을 범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육은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국가가 위탁받았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스마트 교육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가는 교육의 형태, 과정, 내용, 방법, 시기 등에서의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연령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동일한 수준과 속도로 같은 시간에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고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고, 학습자로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교육을 다양화 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정부도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뢰도를 약화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토 론

‘한국의 추락’ 부를 좌편향 - 反시장 교육 경계해야

권 순 활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국의 추락’ 부를 좌편향-反시장 교육 경계해야

권순환(前 동아일보 논설위원)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미국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인도 뭄바이에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한 가족이 있었다. 1947년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분리 독립한 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다. 가족 중에 절반은 이슬람 국가로 새로 태어난 파키스탄으로 가고 나머지는 인도에 남았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한 친척은 파키스탄으로 옮겨 간 사람들의 삶이 인도에 남은 사람들보다 어려운 것을 알게 됐다. 그가 부친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아들아, 인도에서 자라는 이슬람교도는 언덕 위의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언젠가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될래요.’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자라는 이슬람교도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언젠가는 저 사람을 죽일래요.’” 프리드먼이 소개한 이 사례는 종교와 민족이 동일하더라도 사회적 풍토에 따라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장 과정에서 몸에 밴 세계관의 차이가 개인적 삶의 행로(行路)도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같은 한민족인 남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 주민의 유전자가 남한 주민보다 열등해서 저런 빈곤과 고통을 겪을 리는 만무하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 경쟁과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체제와 제도인가 그렇지 못한가의 차이와, 어떤 국가 지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같은 민족이지만 경제사회적으로는 물론 신체 발육면에서도 비교도 할 수 없는 현격한 격차가 발생했다.

청소년 시절에 어떤 세계관과 경제관을 갖느냐는 것은 그 후의 남은 인생을 상당 부분 좌우한다. 건강한 열정과 어두운 열정, 창조적 상상력과 파괴적 상상력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세한가에 따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의 성쇠(盛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의 무게는 각별하다. 교육당국과 교육자들이 어떤 ‘세상 읽기’를 가르치느냐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한 명의 탁월한 인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현대 세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국가 간

경쟁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상곤 교육부장관’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이른바 친(親)전교조 좌파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의 한국 교육은 전교조식 교육관이 지금까지보다 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교육 현장에서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다. 정부 차원에서 벌써부터 법외 노조인 전교조 합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전교조식 교육관에 물든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護國), 부국(富國)의 역사에 부정적 인식을 갖기 십상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세계 최악의 폭압적 전체주의 왕조(王朝) 세습체제 독재자들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보다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인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인 박정희를 더 증오하는 듯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까지도 때로 나타난다. 세계적 석학들이 높이 평가하고 제3세계 국가지도자들이 자국의 발전모델로 벤치마킹하며,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젊은이들이 ‘코리아 드림’을 꿈꿀 수 있게 한 ‘한강의 기적’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힘든 상황 속에 이뤄진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 그리고 부국의 장대한 발걸음들은 그에 이어 성취된 민주화의 발걸음과 함께 높이 평가할 만한 한국사의 위업(偉業)인데도 전교조식 교육관으로는 이런 균형감각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정책 기초에서 경쟁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심지어 좌악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우려스럽다. 물론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의 빼놓을 수 없는 목표 중 하나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과거 한때 ‘유토리 교육’을 중시했던 일본에서 최근 다시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관심을 돌리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리지 않은 중국에서도 교육의 경쟁적 요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현행 외고나 과학고가 지닌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입으로는 교육의 경쟁적 요소를 비난하는 상당수 유력 좌파 인사들이 정작 자기 자식은 외고 같은 특수학교에 보내거나 고가(高價)의 사교육을 받게 하는 일, 기회만 되면 비싼 돈을 들여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표리부동과 위선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씁쓸하다.

한국의 교육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우리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의 가치다. 넓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에 포함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 전체주의나 북한식 독재체제를 편드는 듯한 교육은 용인될 수 없다. 가뜩이나 좌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가 큰 현실에서 전교조식 교육관이 더 확산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교육에서 어떤 경제관을 가르치느냐는 문제도 중요하다. 물론 시장경제도 완전하진 않다. 하지만 재산권과 법치주의의 두 기둥 위에 개인적 선택과 책임, 자원의 희소성과 기회비용, 민간기업과 ‘작은 정부’를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는 개인적 성공과 공동체 번영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한국의 중고교 교과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 내용이 매우 미흡하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구인회 최종현 같은 주요 기업인의 공적에는 눈을 감고 압축적 고도성장과 기업의 그늘을 더 부각하는 식의 교육으로는 한국 현대 경제사의 실체적 진실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접근법으로는 한국의 경제기적 역사를 높이 평가하는 외국인들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자기 아들딸이 ‘남의 탕’과 계층적 증오에 바탕을 둔 잘못된 가치관의 포로가 되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드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법 없이도 살 정도로’ 건전하고 상식적으로 살아오면서 자식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국민 중에 “내 자식이 극단적 전교조식의 좌편향-반(反)시장 교육으로 오염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민을 택하겠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인간의 열정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긍정과 연속성, 발전의 추구로 이어진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과 단절, 파괴를 특징으로 한다. 독일 출신 유대계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후자(後者)를 ‘어두운 열정’이라고 불렀다. 어두운 열정은 정치적 투쟁의 논리로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한 사회의 발전과 풍요를 만들어내긴 힘들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나마 이뤄놓은 공동체의 성취를 무너뜨리고 퇴보와 추락을 불러올 위험성이 높다.

글로벌화의 진행 속에서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 흐름에 눈감고, 현실에서 번번이 실패로 판명된 과거 극좌 운동권 논리의 찌꺼기를 아직 판단능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해 개인과 국가의 장래를 망친다는 건 지적으로 게으르고 도덕적으로도

비겁한 행태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걸머질 아이들이 어두운 열정이 아닌 밝은 열정에 입각한 올바른 세계관으로 무장(武裝)해 세계 속에서 힘차게 뻗어 나가는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교육당국과 교육자를 포함한 이 땅의 기성세대들에게 있다고 믿는다. <끝>

토 론

전교조의 실태

조 형 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전교조의 실태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조형곤

전교조의 법외 노조 선택은 박근혜 정부 탄압의 결과가 아닌 전교조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전교조가 소속 교사들마저 발길을 돌리는 실책을 거듭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회비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급기야는 전임자의 임금을 주지 못할 형편에 놓였다. 자구책이 필요했다. 꽤나 똑똑한 경영진이 들어섰다. 이들은 고심 끝에 전임자 및 상근자 구조조정 명분 마련을 위해 박근혜 정부 탄압이라는 빌미를 만들었다. 그것이 곧 전교조 법외노조 선택이다.

전교조의 속사정은 이렇다. 이들은 한 때 9만3천 명의 회원에 200억의 예산을 쓰는 거대한 집단이었다. 2006년에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회원이 1만 여명 탈퇴했다. 탈퇴자들은 이랬을 것이다. “우리가 선생님이지 노동자는 아니지 않은가”

진보정권이 무너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다시 1만 여명이 탈퇴했고, 일제고사의 실시 등 자율과 경쟁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실시하던 첫 해(2008년)에도 5천여 명이 탈퇴했다. 자기 자식은 열심히 공부해라 남의 자식은 시험 보지 마라는 전교조의 구호는 양심 있는 교사들의 대규모 탈퇴를 불러왔다.

교사시국선언으로 4천명 탈퇴, 조전혁 명단공개로 6천명의 탈퇴가 이어져 2011년에는 회원수가 5만5천여 명으로 추락했다. 이 정도의 회원수로는 더 이상 전교조 전임자 및 상근자의 월급을 주지 못할 형편에 이른 것이다.

학부모단체인 교학연 김순희 대표의 전교조 탈퇴종용편지로 자존심 상한 전교조 교사들은 이듬 해 학교별 내용증명발송을 통한 시국선언 일반교사들의 명단대조 사태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으로 5천여 명이 탈퇴하기에 이른다.

이제 전교조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전임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때 전교조의 집행부가 선택한 것은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강행을 빌미로 본인들 스스로 법외노조를 선택하여 결국 전임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 나가려는 자구책이었다.

이에 관한 근거 자료로 전교조 회원수 현황, 전교조 대차대조표를 공개하는 바이다.

한편 2010년 당시 조전혁 의원은 전국국어교사모임(이하 전국모)을 고발한 바 있다. 전국모는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교사단체이다. 당연히 이들은 비영리단체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은 ‘나라말’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었다. 물론 직접 운영이 아닌 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했다.

이 ‘나라말’ 출판사는 학교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학교당 230여권의 도서를 보급

하여 중학교 도서관에 책자를 보급하는 출판서로서는 5위를 기록했다. 전국에 1만 1천개의 학교로 계산하면 250만 여권의 도서를 공급한 것이고 도서 한 권당 1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무려 250억원의 매출을 학교 도서관을 통해 올린 것이다. 이렇게 큰 출판사를 웬만한 문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책 한 권 찍고 1천권을 파니 못 파니 하는 현실에서 나라말 출판사는 ‘내부자 거래’를 통한 대량 판매를 해왔다.

전교조가 쓰고 전교조가 찍고 다시 전교조가 국가 예산으로 책을 사들였다. 교육공무원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것이다. 물론 전국모가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기에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나라말 출판사는 당시 조전혁 의원의 고발 이후 아주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했다. 회사에 근무하던 출판노조원들은 하루아침에 회사를 잃고 법정 고발 사태를 전개한다. 재벌기업은 노조의 반발로 이런 신속한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빨랐다.

나라말 출판사의 학교도서 보급 현황에 관한 자료는 역시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은 전교조 회원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김구현씨의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며 학교알리미를 활용하여 실제 회원수와 최대한 근접하게 맞추었음을 밝힌다.

▶ 전교조 회원 현황

년도	회원수	전임	상근	전임자급여	연간조합비	주요사건	회원수 추정근거
1999년	56,666					전교조 합법화	김구현
2001년		96	32	29억 3천만			김구현
2002년	84,964	89	31			노무현 당선	김구현
2003년	93,860					서교장 자살사건	김구현
2004년	91,243						김구현
2005년	90,857						김구현
2006년	86,918					민주노총에 가입	김구현
2007년	77,700	133				이명박 당선	김구현
2008년	73,317	105			169억	일제고사 실시	김구현
2009년	65,145				137억(내부)	교사시국선언	내부
2010년	61,273	72	27	37억2천만	133억(기준)	조전혁 명단공개	조전혁
2011년	55,317				120억	김순희 탈퇴편지	학교알리미
2012년	54,808				119억	내용증명 및 고발	경향신문
2013년	51,993	72			113억		학교알리미
2014년	???					법외노조	

▶ 전교조 회원수 파악 근거(학교알리미 전교조 가입비율 공시 자료)

구분	교원수(교육부 홈페이지 공시)				전교조가입비율				회원수(교원수 * 가입비율)			
	'10	'11	'12	'13	'10	'11	'12	'13	'10	'11	'12	'13
유치원	36,461	38,662	42,235	46,126		5.5	4.4	4.4		2,126	1,858	2,030
초등학교	176,754	180,623	181,435	181,585		10.2	9.7	9.1	-	18,424	17,599	16,524
중학교	108,781	110,658	111,004	112,690		15.2	14.2	13.2	-	16,820	15,763	14,875
고등학교	126,423	131,083	132,953	133,414		13.2	14.3	13.5	-	17,303	19,012	18,011
특수학교	6,857	7,407	7,654	8,012		8.7	7.7	6.9	-	644	589	553
합계	455,276	468,433	475,281	481,827						55,317	54,822	51,993

초중고특수학교는 전교조가입비율을 공시하여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유치원은 공시자료가 없어서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2012년 전교조 회원수(54,808명)를 근거로 유치원의 전교조 교사 가입비율을 추정한 것임.

▶ 플리뉴스 (2010.07.08.) LG전자 노사 타임오프제 합의...노조 전임자 24→17명으로 조정

이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근로시간 면제자 11명과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 6명, 총 17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24명의 노조전임자 가운데 7명이 현업에 복귀한다.

전교조 대차대조표

▶ 2010년 전교조 예산(안) 수입총괄

과 목			금액	산출근거	비 고	2009년 결산	증감액
관	항	목					
수 입	조합비	운영조합비	7,555,086,000	$63,000 \times 8,816.5 \times 6$ $63,000 \times 11,170.5 \times 6$	55%	7,535,743,821	19,342,179
		급여조합비	5,082,512,400	$63,000 \times 5,931.1 \times 6$ $63,000 \times 7,514.7 \times 6$	37%	5,069,500,395	13,012,005
		투쟁조합비	412,095,600	$63,000 \times 480.9 \times 6$ $63,000 \times 609.3 \times 6$	3%	411,040,572	1,055,028
		피해자구제 조합비	686,826,000	$63,000 \times 801.5 \times 6$ $63,000 \times 1,015.5 \times 6$	5%	685,067,622	1,758,378
	기 타	판매수익	24,500,000	달력판매수익금		47,761,995	-23,261,995
		수입이자	85,800,000		금융 이자	160,508,197	-74,708,197
		성 금	0			60,008	-60,008
계			13,846,820,000			13,909,682,610	-62,862,610

▶ 지출예산 요약(지출총괄예산 다음 페이지 상세기술)

전임자 및 상근자 급여 : 50억원

지부 지원금 : 50억원

민주노총 상납 등 : 11억 8천

피해자 구제기금 : 7억 2천(피해자 구제기금 적립액은 15억원인데 반해 지출예산은 20억원 임)

투쟁기금 전입 : 4억 1천(전년도 이월 7억 5천, 합계 11억 6천) * 2010년에 전액 사용

일반운영비 : 4억원

신문제작비 : 2.7억원

남북교육교류기금(총당금) 전입 : 5천7백만

▶ 2010년 전교조 예산(안) 지출총괄

과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2009년 결산	증감액
관	항	목					
인건비	급 여	급 여	3,829,050,736	4,967,141원×2월×88명 4,028,936원×10월×72명 성과급 3,000,000원×18명	전임자	3,716,057,300	112,993,436
			1,087,606,116	3,206,809원×12월×27명 성과급 3,000,000원×27명	상근직원	1,047,925,550	39,680,566
			40,000,000	4개 지부×10,000,000원 (시간급, 조직부담보험료)	단시간근로자	0	40,000,000
			13,442,986	5,082,512,400원×0.26%	예비비		13,442,986
		보험료	87,000,000	고용,산재,의료,연금	4대보험	80,439,494	6,560,506
		소 계	5,057,099,838			4,844,422,344	212,677,494
비용유	유지비	제 좌	337,705,800	전년도 지출액×70%		534,013,344	-196,307,544
	복지비	제 좌	6,120,000	전년도 지출액×106%		5,749,730	370,270
	관공비	업무추진비	47,600,000	전년도 지출액×100%		47,503,470	96,530
	법인세	법 인 세	70,000	전년도 지출액×109%		64,370	5,630
	인건비	용역급여	2,000,000	2009년 연말정산		1,105,920	894,080
사업비	지원교부금	종합비 지원교부금	5,000,083,280	63,000×5,834.92×6 63,000×7,392.84×6	지부,지회사업비	4,994,793,943	5,289,337
		기타 지원교부금	274,730,400	63,000×363.4×6 63,000×406.2×6	교육희망	342,533,812	-67,803,412
		기타지원교부금	4,000,000	160,000×25	제주지부	4,000,000	0
		조직지원금	600,000	50,000×12		1,388,300	-788,300
	대외협력사업비	대외분담금	1,181,340,720	63,000×1,378.58×6 63,000×1,746.66×6	민주노동총기타분담	1,246,823,067	-65,482,347
		연대사업비	15,520,000	전년도 지출액×75%		20,677,280	-5,157,280
	변론소송비	변론소송비	100,000	영치금, 투쟁조합비 외 소송		100,000	0
	교육선전사업비	제 좌	181,836,600	전년도 지출액×77%		236,270,375	-54,433,775
		자료구입비	274,730,400	63,000×320.6×6 63,000×406.2×6	교과교육자료	0	274,730,400
	행사비	제 좌	194,311,380	전년도 지출액×87%		222,752,019	-28,440,639
기타특별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32,412,562	(5,082,512,400원×0.5%) +예금이자 7,000,000		58,519,271	-26,106,709
	투쟁기금	투쟁기금충당금전입액	413,595,600	(63,000×480.9×6) +(63,000×609.3×6) +예금이자 1,500,000		429,586,456	-15,990,856
	피해자구제기금	피해자구제기금충당금전입액	716,826,000	(63,000×801.5×6) +(63,000×1,015.5×6) +예금이자 30,000,000		717,745,639	-919,639
	급여보전기금	급여보전기금충당금전입액	20,000,000	예금이자		199,336,043	-179,336,043
	장학기금	장학기금적립금전입액	10,000,000	예금이자		11,358,637	-1,358,637
	회관건립기금	회관건립기금충당금전입액	3,000,000	예금이자		3,284,739	-284,739
	복지기금	복지기금충당금전입액	300,000	예금이자		6,023,930	-5,723,930
	남북교육교류기금	남북교류기금충당금전입액	57,446,080	(63,000×64.12×6) +(63,000×81.24×6) + 예금이자 2,500,000원		57,666,756	-220,676
예비비	예 비 비	15,391,340	(63,000×1,017.52×6)+(63,000×1,137.36×6)×2%			15,391,340	
계			13,846,820,000			13,985,719,445	-138,899,445

▶ 2010년 기금 조성·운용 계획(안)

▶ 투쟁기금적립금 조성계획서

기금조성기간	기금조성방법	금액	비고
전년도 이월		750,806,736	
1.1.~12. 31.	조합비 중 3%	412,095,600	63,000×480.9원×6월(1~6월) + 63,000×609.3원×6월(7~12월)
1.1.~12. 31.	금융이자	1,500,000	
계		1,164,402,336	

▶ 투쟁기금적립금 운용계획서(안)

기금사용기간	기금사용내역	금액	비고
1.1~12. 31.	소송비 ₩469,100,000	100,000,000	시국선언 2심
		113,000,000	정치탄압 관련 1심
		6,100,000	조합원명단 공개 가처분신청
		250,000,000	조합규약개정, 시국선언 3심, 정치탄압 관련 2~3심, 서울 교육감 선거 관련 3심
		50,000,000	지부 단위 현안투쟁, 기타 전국단위 투쟁 관련 소송비
1.1~12. 31.	벌금 ₩129,800,000	88,000,000	시국선언 관련(88명×1,000,000원)
		21,800,000	서울 교육감선거 관련(16명)
		20,000,000	지부 단위 현안투쟁, 기타 전국단위 투쟁 관련 벌금
2. 9.	교권교육계약	5,000,000	09년 교권교육전문가 계약분회, 지회 교권교육 계약 잔금
1.1~12. 31.	교육자료 사업	284,500,000	조직화대와 강화 사업(우리아이들, 우리교육, 교과자료)를 배포 63,000명×8,400원×51% (나머지 사업비는 본부 예산에 편성)
1.1~12. 31.	교육자치특위 ₩10,140,000		
1.1~12. 31.	학교자치특위 ₩7,169,000		
1.1~12. 31.	장애인교육권 확보 투쟁	2,000,000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분담금
1.1~12. 31.	교육과정개편 투쟁 ₩3,550,000		
1.1~12. 31.	원상회복투쟁 ₩5,600,000		
1.1~12. 31.	MB정부 교육정책 대응투쟁 ₩83,750,000	4,000,000	교사용 선전지(1회×4,000,000원)
		5,000,000	대국민 선전지(1회×5,000,000원)
		4,500,000	교사, 대국민 여론조사(1회×4,500,000원)
		250,000	각종 기자회견(5회×50,000원)
		70,000,000	전국교사대회와 농성 등
1.1~12. 31.	교육비리및 교육정책 대안 요구 투쟁		₩3,240,000
1.1~12. 31.	전교조탄압 대응과 지키기 ₩77,600,000	350,000	연대단체와의 회의(5명×7,000원×10회)
		250,000	각종 기자회견(5회×50,000원)
		5,000,000	대국민 선전지(1회×5,000,000원)
		4,000,000	교사용 선전지(1회×4,000,000원)
		3,000,000	동영상 제작비
		35,000,000	일간지 광고(4회×8,140,000원)와 조판비 등
		20,000,000	희망기금 모금 리플렛 제작(2회) 등
		10,000,000	집회와 농성 등
1.1~12. 31.	현안 투쟁	10,000,000	전국단위 투쟁으로 인정받은 지부 단위투쟁 사업비 지원금
계		1,141,449,000	

예산서상으로 볼 때, 적립해둔 투쟁기금을 2010년에 다 쓴 것으로 추정됨

▶ 피해자구제기금적립금 조성계획서

기금조성기간	기금조성방법	금액	비고
전년도 이월		751,258,656	
1.1~12.31	조합비 중 5%	686,826,000	63,000×801.5×6월(1~6월) + 63,000×1,015.5원×6월(7~12월)
1.1~12.31	금융이자	30,000,000	
계		1,468,084,656	

▶ 피해자구제기금 운용계획서(안)

사용기간	사용내역	금액	비고	결정과정
1.1.~12.31	최한상	50,702,000	경기남문중해임 2004.5.11~2007.5.10까지 생계비 지급	263차 중집 319차 중집
1.1.~12.31	이을재	58,956,000	2003년 7월 1일 직위해제 (2003/7/1 ~ 2004/02/29 전임 급여) 2004.3.11. 당연퇴직	248차 중집 260차 중집
1.1.~12.31	박춘배	51,912,000	인천외고 2004년 4월 24일 징계 파면	208차 중집
1.1.~12.31	이주용	51,345,000	인천외고 2004년 4월 24일 징계 파면	208차 중집 319차 중집 362차 중집
1.1.~12.31	조연희	54,616,000	동일학원 2006.06.29 징계 파면 2005.03.01~2006.07.31 직위해제 보전 2006.09.11 소청심사위 해임 결정	311차 중집 366차 중집
1.1.~12.31	박상욱	51,980,000	민주노총 하이스코 투쟁 2005년 12월 5일 직위해제 ⇒ 직위해제 보전 집행유예 선고받아 2006.12.8 당연퇴직	42차 중양위 319차 중집 366차 중집
1.1.~12.31	조희주	62,995,000	04년 탄핵시국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 2006.11.8 당연퇴직	319차 중집 366차 중집
1.1.~12.31	장혜옥	62,909,000	04년 탄핵시국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 2006.11.8 당연퇴직	319차 중집 366차 중집
1.1.~12.31	원영만	62,959,000	04년 탄핵시국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2006.11.8 당연퇴직	319차 중집 366차 중집
1.1.~12.31	양민주	40,425,000	부산꽃동산유치원 처우개선 투쟁과정 피해⇒	329차 중집 47차 중양위
1.1.~12.31	손규환	27,755,000	포항 대동중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 과정 2007.6.9 해임 ⇒ 2007.6.9~2010.6.8 활동비 지급	336차 중집
1.1.~12.31	일제고사 남정화의 3인	182,003,000	강원지부 남정화, 구미숙, 이범여, 김주기 2008년 11월 5일 강원도학업성취도평가 관련 2009년 1월 30일 파면.	358차 중집
1.1.~12.31	일제고사 서울(8인)	331,446,000	서울지부-김윤주, 박수영, 설은주, 송용운, 윤여강, 정상용, 최혜원 일제고사 관련 2008년 12월 17일 해임	358차 중집
1.1.~12.31	진영옥	34,293,000	민주노총 총파업 직위해제 차액보전금지급	47차 중양위
1.1.~12.31	부산 통일(4인)	179,466,000	부산 통일학교관련 09.2.27 직위해제	362차 중집
1.1.~12.31	4대 보험 료	80,000,000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조직부담	
1.1.~12.31	회의비	1,500,000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 교통비, 식대	
1.1.~12.31	변론소송 비	200,000,000	일제고사, 통일학교, 시국선언 등 징계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신분회복 소송비	
1.1.~12.31	피해자	450,000,000	시국선언(71명) 정직과 감봉/09년 일제고사(16명) 등의 피해자 급여 보전	
계		2,035,262,000		

피해자 구제기금 적립액은 15억원인데 반해 지출예산은 20억원임

“민주노총 이제 그 가면을 벗어라!”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아닌 전교조 포함 귀족 공무원의 집합체이고 대변인이다.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민간, 공무원, 교원의 노조 조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의 노조 조직률은 9.2%, 공무원은 55.8%, 교원은 17.3%의 노조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민간노동자들의 대표성이 전혀 없다. 민간 노동자들의 91%는 노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들은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고 교원들은 17.3%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지만 노조와 비슷한 성격의 교총에 가입한 숫자까지 합하면 이 또한 거의 절반에 이른다. 교총이 노조는 아니지만 하는 일은 노조와 거의 비슷하다.

한편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69만 명의 2012년도 민주노총 조직을 살펴보면(표1,2) 공무원, 공공기관, 전교조, 대학병원, 은행 등 공공기관 소속의 노조원들이 31만 6천명에 이른다. 필자가 민간으로 분류한 공공운수연맹의 7만여 노조원들도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 회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까지 공공의 영역에 포함한다면 민주노총의 절반이 공공의 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무원 및 공사 직원 그리고 교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바, 한마디로 귀족 공무원들의 집합체라고 불러야 맞다.

한편 귀족 금속노조는 귀족 공무원들의 돌격대이다.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귀족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집회시위 현장에 뒷집 지고 나타나면 돌격대들은 자신들의 불법 폭력을 숨기려고 또 다시 마스크를 쓰고 몽둥이를 든다. 이것이 민중총궐기의 진짜 모습이다.

국민은 도대체 언제까지 귀족공무원과 귀족노조를 위해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답답하다.

이제 대안을 생각해보자.

귀족공무원들이 돌격대인 귀족금속노조를 앞세워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요새는 동네 주폭들도 곧바로 잡아넣는 세상이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이 아닌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030년에는 현재의 좋은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세상이 곧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사고에 젖어들어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국민들은 귀족 공무원들이 속한 기관을 가장 우선적으로 민영화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상당히 늘어난다. 청년 일자리도 동시에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원의 민영화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강원도 강릉에 사는 강릉중학교 교사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 48만 교육공무원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해당 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을 전환하고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면 교사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교원의 민영화이고 수요자 중심 교육의 근본적 해법이다. 학생이 사라지고 있고 그나마 적은 학생들이 배우기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시험보고 줄 세우는 일만 하는데 그 학교 교사들을 위해 연간 30조원의 인건비를 쓰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일이다.

귀족 금속노조를 앞세워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귀족 공무원들을 위해 별도의 공무원연금이나 교원연금을 돌리면서 막대한 혈세를 쓴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4대 연금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고용을 보장하고 권위와 존경을 실어준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이 표면화 되어 있는바 지금처럼 귀족 금속노조를 돌격대 삼아 다시 국민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민간 노조와 함께 할 때는 언제고, 공무원연금이나 교원연금처럼 별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역겨워서 못 듣겠다.

또 다른 대안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주력산업 구조조정법)이 제정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귀족 노조가 많은 곳부터 적용해 나가게 하는 국민적 압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도 살리고 주력산업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 및 빅딜을 하게 하자는 법인데 이를 야당이 막고 있다. 이를 반드시 입법화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귀족노조가 극심한 반대를 할 텐데 국민적 합의로 귀족노조가 많은 기업부터 이 ‘원샷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해왔는데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성장신화가 올해부터 깨지고 있다. 제조업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무역 1조 달러 트로피마저 반납해야 할 때가 돌아오고 있다. 중국은 물론 인도에도 못 미치는 제조업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귀족 공무원들과 귀족노조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2030년, 당신들의 자식들 또는 옆집 손자들이 중국이나 인도의 관광객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을 때, 연금 받아서 해외여행 다녀오는 당신들의 노후가 참으로 행복할까? 이제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민주노총 조합원 현황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료에 공공·민간 구분란 추가, 2012년)

구분	가맹조직	노조명칭	노조수	여성조합원수	전체조합원수
민간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35	340	7000
민간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36	100	20000
민간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6	700	57258
공공	공공기관	공공운수노조	87	25000	65585
민간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23	2200	28094
민간	공공운수연맹	미전환 노조	72	3600	40716
공공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10	22700	75700
공공	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7	70	800
민간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228	6804	141995
민간	금속노조	미전환노조	5	-	7393
공공	대학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	124	2983	7021
민간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연맹	59	1284	4144
공공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51	25000	37848
공공	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8	800	1600
민간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3	128	150
민간	서비스연맹	서비스유통노동조합	1	14	16
민간	서비스연맹	미전환노조	63	8184	9550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농협노동조합	61	3044	8051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16	1813	4316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39	8577	18044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수협노동조합	16	200	600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축협노동조합	50	836	1800
공공	사무금융연맹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40	199	240
민간	사무금융연맹	미전환 노조	69	11750	26882
공공	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135	1981	12385
민간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여성노동조합	20	3171	3700
민간	여성연맹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2	25	25
민간	여성연맹	미전환 노조	1	30	30
공공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57	38832	60249
민간	화학섬유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71	786	6890
민간	화학섬유연맹	산별미전환노조	17	287	8062
민간	정보경제연맹	기업별노조	11	179	1185
공공	학교비정규직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112	21023	21899
민간	지역본부	직가입노조	107	6662	14434

민주노총의 조합원 구성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2012년)

구분	분야	조합원수	구분	분야	조합원수
공공	공공 분야 합계	316,138	민간	민간 분야 합계	377,524
	공무원노조	75,700		금속노조	149,388
	공공기관	65,585		건설산업연맹	84,258
	전교조	60,249		공공운수연맹	68,810
	보건의료노조	37,848		사무금융연맹	26,882
	사무금융연맹	33,051		화학섬유연맹	14,952
	학교비정규직	21,899		지역본부	14,434
	언론노조	12,385		서비스연맹	9,716
	대학노조	7,021		민주일반연맹	4,144
	비정규교수노조	1,600		여성연맹	3,755
	교수노조	800		정보경제연맹	1,185
합계	총합계 693,362				

전교조의 실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교육과정의 편향성이다.

“저희 할아버지는 ‘패악업주’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잘 난 손자

顯祖 考 悖惡業主 府君 神位 (현조 고 패악업주 부군 신위)

이는 강남에서 원룸 빌딩 세 채와 10층짜리 상가를 가지고서 임대사업을 하는 40대 중반의 집안 이야기이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직후 동네에서 20여 년간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크게 돈을 벌었고, 아버지가 일찍 죽자 손자가 이를 물려받아 땅 부자가 되고 건물 부자가 된 임대사업가이다.

할아버지에 대해 그렇게도 모를 리 없건만 손자인 이 임대사업가는 할아버지 제사상의 지방에 ‘학생’ 대신 ‘동네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한 전당포 주인’이란 뜻으로 ‘패악업주’를 쓰고 있다.

당시 전당포는 은행의 역할을 했다. 금가락지만 맡는 것이 아니라 땅문서를 맡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패물을 맡기고 빌린 돈으로 아들 대학 공부를 시켜 사법고시에 합격시켜 판사를 만들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땅문서를 맡기고 빌린 돈으로 장사를 시작해 오늘날 대기업이 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가락지와 비너까지 맡긴 돈으로 겨우 두 달 먹고 살더니 그 이자를 갚을 길 없어 전당포 주인에게 고초와 수모를 당하며 죽어간 사람도 있다. 임대사업가인 손자가 본 할아버지는 바로 그 모습이다.

세월이 흘러 임대사업가의 아들은 아버지의 제사상에 이렇게 지방을 써 붙일 것이다. 현 고 ‘서민 등쳐 전세금 올려댄 악덕 임대사업자’ 부군 신위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이 딱 이 꼴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수근 대고 있는 모습이 여기 저기 널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당포 사업가인 할아버지에게도 명암(明暗)이 있듯 우리나라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두고도 공과(功過)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립이며, 공산주의자와 끝까지 싸워 이긴 점. 6.25 전쟁에서 미군과 연합군을 끌어 들여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한 공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국민들에게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해 문맹률을 현저히 떨어트린 공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혁명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하야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많은 국민들이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으며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로 평가되는 발취개헌도 따지고 보면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

하려 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 발취개헌 사건은 1952년 전쟁 와중에 일어난 일이다.

필자는 1년 전, 전국 255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의 도서목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무려 350만권의 책 제목을 분석하고, 저자와 출판사별 장서의 숫자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 결과는 신문과 월간지 등에 크게 보도되었고, 결론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좌편향이라는 사실이었다.

또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유관순 열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캐내어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이를 특집과 토론프로그램에서 다루도록 했다. 그 결과 유관순 열사를 다루지 않는 역사교과서들이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게 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역사학계가 워낙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 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학생들의 내신 평가용으로 보는 시험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고등학교 한국사를 배운 학생들이 근현대사 부분을 시험 보는 2학기 기말고사의 시험지를 구해서 분석해 보았다. 다음은 문제가 될 만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기출문제

아래 연속되는 3개의 문제는 경기○○고등학교의 기말고사에 나란히 나오는 문제들이다.

▶ 이승만 관련 문제

11.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자료 (가)와 (나) 사이에 전개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점)

(가) 이승만의 청원서(1919.02.25)

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인 국민회 위원회는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공식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중략)…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나) 이승만 불신임안 주문(1925.03.11)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면직시킴. …(중략)… 현임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대미 외교 사업을 빙자하고, 미주에게 동포가 정부에 상납하는 재정을 모아서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정부 행정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국제 연맹과 열강 회의를 대상으로 하던 구미 외교 사무가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헛된 선전으로 동포를 유혹하여 외교비 모집을 계속하여서 그 재정으로 자기의 지지자를 매수하고

있다.

- ①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 ②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 ③ 연통제와 교통국이 마비되었다.
- ④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제로 바뀌었다.
- ⑤ 외교활동이 강대국의 외면으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표 12 경기 OO여고 2012년 한국사 기출 1-2기말고사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1919년부터 1925년 3월 사이에 전개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라고 쉽게 풀어 쓸 필요가 있는 문항이다. 이 문제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든 문제에 불과하다.

▶ 일제 식민지 시대상에 관한 문제

16. 다음과 같은 장면을 목격하는 시기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점)



- ① 칼을 차고 아이들을 욕박지르는 교사
- ② 양곡 배급이 적어 한숨을 짓는 아버지
- ③ 징병과 징용을 권유하는 최남선과 이광수
- ④ 금불이 쇠불이마저 빼앗기고 울부짖는 할머니
- 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기를 거절하다 끌려가는 삼촌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장면들이지만, 이를 이렇게 자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차라리 왜 이런 수모를 당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적 교훈이 된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점과 나라가 힘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과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찾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의 민중운동 선동

【서술형】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9.0점)

(가)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이냐? …(중략)… 일본 강도 정치하에서 문화 운동을 부르는 자 누구이냐? …(중략)… 첫째는 외교론이니, 최근 3·1운동에 일반 인사의 평화 회의, 국제 연맹에 대한 괴신의 선전이 이천만 민중의 힘 있는 전진의 기운을 없애 버리는 계기가 될 뿐이였도다. …(중략)… 둘째는 준비론이니 헤이그 특사도 독립 회복의 복음을 안고 오지 못하매, 이에 차차 외교에 대하여 의문이 되고 전쟁 아니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그러나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이 무엇으로써 전쟁을 하겠느냐? …(중략)… 우리는 민중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생략)…

(나) 이봉창의 사진



- 1) (가)를 작성한 인물을 쓰시오.
- 2) (가)의 활동 지침에 따라 활동한 단체의 이름을 쓰시오.
- 3) (나)는 어떤 의열 단체에서 활동한 이봉창의 사진이다. 이 단체의 명칭을 쓰시오.
- 4) (나) 단체의 활동 결과 발생한 대외적 결과를 서술하시오.

3.1운동은 비폭력평화운동으로 세계사에 이름을 떨쳤으며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끼쳤고 인도의 간디가 펼쳤던 비폭력 평화운동과 견주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위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한국사는 유관순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봉창의 의거 즉 폭력과 암살, 파괴와 폭동을 강조하는 것은 민중사관에 의한 선동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봉창이 한 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유관순은 없고 이봉창의 의거만 내세우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반면 3.1운동 이후 일본은 강압적 통치보다는 문화통치를 내세웠다.

다음의 네 문항은 서울OO고등학교의 기말고사에 나란이 나온 문제들이다. 김구와 이승만 관련된 문제와 박정희와 전태일과 관련된 문제를 비교해 보자.

▶ 김구 관련 문제

다음 연설의 배경이 된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음속의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다가 38도선을 배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 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②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의 총선거를 결정하였다.
- ③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④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 ⑤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표 15 서울OO고등학교 2012년 한국사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 이승만 관련 문제

다음은 어떤 사실의 배경을 설명한 것인가?

<보기>

이승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더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승만 지지파로 결성된 자유당은 전쟁 중이던 1952년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두고 협박하여 이를 강행하였다.

- ① 발췌개헌 통과
- ② 반민특위 활동
- ③ 제헌 의회 개회
- ④ 보안법 강제 개정
- ⑤ 이승만의 정읍 발언

▶ 박정희 관련 문제

다음은 유신 헌법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과 다른 것을 묶어 놓은 것은?

<다음>

- 가.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 나. 대통령 선거 제도를 직선제로 운영하였다.
- 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 라.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강조하였다.
- 마. 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중선거구제로 운영하였다.

- ① 가-다 ② 나-라 ③ 나-마 ④ 다-라 ⑤ 다-마

▶ 전태일 관련 문제

다음의 사료가 전하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다 음>
 저희들은 근로 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종업원의 90%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또한 3만여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이들은 일주일에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1일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10-12시간으로 단축해주시시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쉬기를 원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① 1970년에 발생하였다.
 ② 편지의 주인공은 전태일이였다.
 ③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였다.
 ⑤ 지식인과 학생들이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로, 반면에 김구는 민족의 영웅으로 묘사했으며, 산업화 부분에서도 전태일은 있으나 정주영과 이병철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교과서를 그대로 반영했다. 지금의 20~30대들은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러한 세뇌 교육의 효과는 매우 크다.

○ 중학교 사회과목 기출문제

다음은 필자가 다른 세미나에서 이미 토론 자료로 사용한 적이 있는 중학교 사회과목의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 사례로 들어보겠다.

8. 다음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에서 생산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1점]

국방, 치안, 교육, 소방, 도로, 항만 등

<보 기>

㉠ 많은 비용 발생 ㉡ 기업의 독점 방지
 ㉢ 이윤추구가 어려움 ㉣ 특정한 사람만 이용함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번 ⑤ 다, 번

그림 8 경기 A중학교 3학년 사회과목 2012년 기출문제

위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보인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윤추구가 어려운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재 안에 교육과 도로 항만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교육은 공교육도 있지만 사교육도 있고, 유아교육이 있는가하면 대학교육도 있고 평생교육도 있다. 이런 모든 교육을 정부가 생산한다는 가정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일은 기업은 못하고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내용은 아니다. 가계 입장에서 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사교육을 시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가계들이 쓰고 있는 사교육비의 총합은 국가 공교육비의 합보다 많은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의 독점 방지가 왜 보기항목으로 제시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은 그 방지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도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경제 체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논쟁중 하나로 부득이 정답을 써내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역지로 꺾어 맞춘 문제이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도록 세뇌시키고 있다.

13. 다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3.1점)

과수원에 심은 과일나무는 좋은 향이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선사해준다. 하지만, 과수원 주인이 받는 경제적 대가는 없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꽃향기보다 적게 생산이 된다.

- ① 세금 부과
- ② 국가 보조금 지급
- ③ 사회간접자본 생산
- ④ 사회보장제도 실시
- ⑤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그림 9 경기 B 중학교 2012년 사회과목 기출문제

위 문제의 정답은 2번 국가 보조금 지급으로 보인다. 그런데 글상자 안에 든 예문의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 과수원의 과일나무는 꽃향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생산하는데 꽃향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꽃향기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물론 꽃향기를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꽃향기를 사거나 파는 과수원 농부도 없다. 그러한 점에서 예문의 적절성은 매우 떨어진다. 이 예문만

으로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꽃향기에 세금부과? 꽃향기 보조금? 그 어느 것과도 연결 지어 생각하기 힘들다. 이를 받아본 학생도 그냥 틀리고 말았다. 그 어떤 보기에든 체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학교의 기출문제이고 이 문제 하나로 내신 등급은 결정되었을 터이다. 그러나 대상학생이 몇 백명 안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학가는 문제가 아닌 고등학교 가는 데는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묻혀 버린 문제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매년 1조원이나 되는 '농수산물 유통 안정기금' 즉 농안기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줘야 한다는 세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출형 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한계를 2가지만 서술하시오.(총 6점, 각 3점)

시장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개인이 자신의 경제생활의 향상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가 부여된 사회에서는, 시장가격의 조절기능에 의해 경제의 기본문제가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모든 경우에 항상 효율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시장 가격의 기능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시장경제에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가격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28

그림 10 경기 C 중학교 2012년 사회과목 기출문제 서술형

5지 선다형이 아닌 서술형으로 선뜻 정답을 써내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의 정답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5) 외부효과반생, 공공재부족, 불공정거래, 소득불균형 등 2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문제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이며 그 정답 또한 적절한 것인지는 경제학자들이 대답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포털에서 외부효과를 검색해보니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Ronald Coase)는 재산권을 분명하게 해 주면 외부효과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기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이론을 주장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외부효과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고 설명하고 있으니 외부효과 발생은 적어도 논란이 있어 보이는 정답이다. 공공재부족이나 불공정거래, 소득불균형 역시 시장 가격의 기능이 가진 한계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정

답은 무엇인가?

이 문제 또한 시장 가격의 기능 즉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역지로 끌어낸 것이며 세뇌라고 지적할 만한 문제이다.

22.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제 체제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주요 생산수단을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고,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에 의해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 ②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
- ③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된다.
- ④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된다.
- ⑤ 근로 의욕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림 12 광주 D 중학교 2012년 사회과목 기출문제

글 상자 안에 제시된 내용은 공산주의를 뜻한다. 이 기출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정답이 없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공산주의라는 체제이론상으로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었을 수 있지만 이 문제가 1930년대의 문제가 아닌 2012년의 기출문제라는 데서 심각성이 있다.

28.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3점)

- ① 이익 추구의 동기를 부여한다.
- ②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 ③ 경제 주체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킨다.
- ④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쉽다.
- ⑤ 경제주체 간의 자유 경쟁을 지향한다.

그림 13 대구 E 중학교 2012년 사회과목 기출문제

형평성의 뜻을 따지다보면 이 문제 또한 정답을 찾기 어렵다. 일한 만큼 댓가를 받는 것은 매우 형평한 것 아닌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 같이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형평한 것인가 하는 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 문제를 출제한 사회과목 교사는 땀을 뻘뻘 흘릴 게 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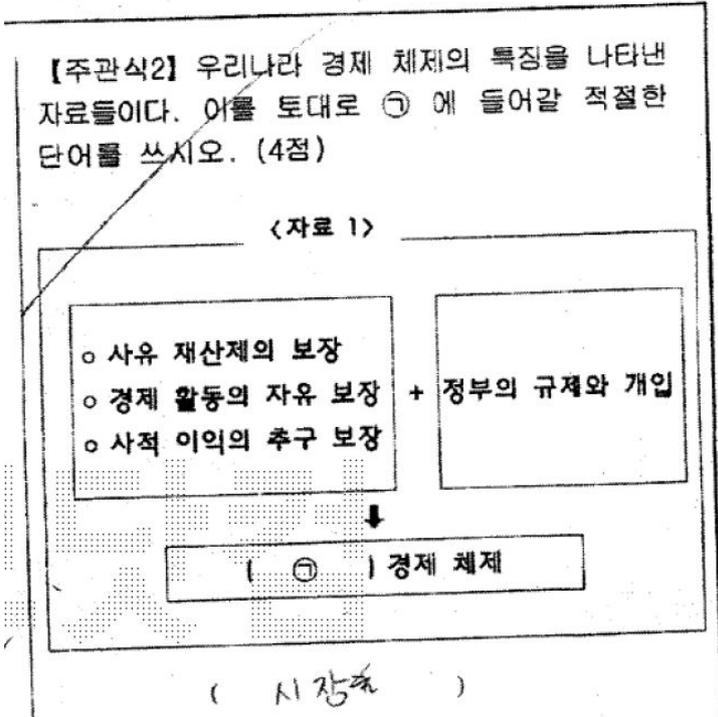


그림 14 전남 F 중학교 2012년 사회과목 기출문제

자료의 왼쪽은 시장경제체를 말하고 오른쪽은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라고 써 놓았다. 그렇다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학생이 쓴 시장경제체제가 정답이다.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규제와 개입을 하는 것이다. 만약 교사가 제시한 혼합경제체제를 정답으로 만들어 내려면 오른쪽 자료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 즉 계획경제 체제를 기술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중간점에서 혼합경제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개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법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키는 근간이지 법치를 한다고 해서 시장경제체제가 혼합경제체제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 결론

누가 봐도 중복교육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례들은 발견되는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빨치산 추모제 학생동원의 사례가 그렇고, 황당한 책이지만 정부추천도서로 선정되어 보급된 바 있는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는 회수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한국사 문제와 중학교 사회 시험문제의 사례처럼 교육과정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건국 과정 폄훼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왜곡시키는 교육내용들을

지적이고 시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중에 하나이다.

중학교 국어 책에는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시나리오가 게재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선학교의 시험 문제로는 ‘동막골’이 의미하는 바를 묻는 것으로, 그 문제의 정답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궤변도 교육관련 토론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나마 교과서와 시험문제는 책임의 소재도 있고 근거가 남아 있으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참고서와 학습지의 경우는 아예 대 놓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매우 잘못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본주의가 인간소외현상을 가져왔다는 참고서의 예제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그러함에도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은 예제 문제를 풀면서 사고가 고착되고 만다. 꼭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자본주의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서점에 가면 경제 관련 서적의 99%는 자본주의가 고장 났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이런 유형의 책들은 이렇다 할 현실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외쳤고, 복지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공공부채는 연간 GDP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대로는 더 이상 국가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교육이 잘못되면 이처럼 일파만파가 되어 나라 전체를 흔들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왜곡된 교육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를 진행해 나갈 기관이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치교육을 고집하느라 이런 문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정부 산하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있지만 이들 공공기관 역시 엄청난 조직과 예산을 쓰고 있지만 이들이 학교 시험문제를 분석했다거나 교육과정의 편향성을 시정해 나간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횡설수설 하고 있을 뿐이다.

유일한 대안은 교육의 직접적 수요자인 학부모와 간접적 수요자인 기업이 나서야 한다. 즉 관이 아닌 민이 나서서 왜곡된 교육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되찾는 것이고, 교육은 공공재라는 잘못된 논리부터 바로 잡으면서 관치교육을 줄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 필자는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배우자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를 떠난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교육, 취미교양교육 등 진정한 학습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부터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초중고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는 연간 480만원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에는 연간 600만원이 공교육비로 쓰여지고 있었다. 이번에 다시 2013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보니 연간 7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물가나 인건비 상승률 등과 비교해볼 때, 초중고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는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런데 학부모는 다시 사교육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민과 관이 투자하는 교육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그에 비

해 얻는 효과는 매우 적어서 가장 효율적이지 못한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게 모두 관치교육 때문이다. 그것도 좌편향된 교과서와 시험문제들이 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를 좀 먹고 있는 중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우수교양도서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교과서를 바꾸는 일이나 시험문제를 하나 하나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용 우수교양도서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또한 이번에 시작하는 푸른도서관 운동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좌편향을 견어내고 국가정체성을 제대로 담아내는 멋진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일 등이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MEMO

MEMO

MEMO
